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반제국주의 운동의
전진을 위해

▶ 8 ~ 9 면

북한 위성 발사
이중잣대와 제대로 보기

▶ 6 면

프랑스 살인 사건
이슬람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가 문제

▶ 11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는 계속된다

▶ 3 면

이집트 혁명
노동운동의
발전 단계와 과제

▶ 10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1)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78호 | 2012년 3월 31일 ~ 4월 13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포트21

OO기 '이명박근혜' NO '민주리통합당' 진보정치의 전진과 투쟁이 필요하다

》 관련기사 4 · 5면

4 · 11총선과 진보 후보 지지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학교 점심시간에나 볼 법한 싸움 ... 앞으로 유엔 회의에서 남한과 북한을 떨어뜨려 놓는 게 최선”

얼마 전 유엔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난동에 대한 외신의 논평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다.”

김재호, '생각해 보니 나경원과 결혼을 했던 것도 같다'

“구멍가게가 찾아 보기 어렵게 된 게 20년은 됐을 것 같은데 한미FTA 때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구멍가게 갈 일이 없었던 FTA 전도사 김종훈

“저는 사실 김씨다.”

김중훈, '제2의 이완용'이라는 비판에 대한 결정적 반박

“기탁금 1천5백만 원 내는 것조차 모르고 선거를 시작한 아주 순수한 마음의 젊은이”

손수조를 감싸는 새누리당 조윤선

“이런 글을 쓰면 수구꼴통으로 취급되거나 집안에서는 ‘엄감’ 소릴 들을 공간이 넓다.”

우파적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한탄하는 <조선일보> 최보식

“재벌의 코털이라도 건드리는 법이라면, 심지어 제 대학 동창, 초등학교 동창한테서도 갑자기 (법 통과시키지 말라며) 전화가 온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복지를 가장 앞에 내세운 새누리당의 선거용 현수막을 보고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다.”

장하준 교수

“이런 소설가들을 제가 어찌 따라갈지 갈 길이 멀습니다.”

공지영, 조중동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에 대해

“박근혜 아바타로 만들려다가 애러 나서, 박근혜 안티로 만들어졌다.”

한 네티즌, 계속되는 손수조 스캔들을 보며

민간인 사찰과 BBK 의혹

계속 추가되는 정권 퇴진 사유

집권 정부가 불법으로 민간인을 몰래 감시하고, 심지어 이런 짓이 적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아예 검찰과 재판부와 짜고 범죄를 숨기려 했다면 어떨까.

제대로 된 민주사회라면, 정권은 즉시 물러나고 관련자들은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디도스 테러부터, 전 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 사안들을 버티기로 넘겨 온 이 정부는 이번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금 터져 나오는 민간인 사찰은 2008년 촛불항쟁에 대한 이명박식 보복이었다.

들뚝난 사찰 수첩에는 촛불항쟁에서 두드러진 구실을 한 다함께에 관한 메모도 쓰여 있었다. 촛불항쟁 당시 다함께 마녀사냥은 결코 우연이 아니

었던 것이다.

이 불법 사찰이 꼬리를 잡히자 저들은 사찰 데이터가 들어 있는 컴퓨터를 폐기하고, 입막음용으로 임태희 등이 구속자들에게 변호사비와 위로금을 주는 등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 지금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인 장진수가 폭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다.

'양치기 소년'

전 대통령실장이자 이상득의 정치적 양아들이인 임태희가 중요한 구실을 한 셈인데, 이것은 이영호 따위가 아니라 이상득이나 이명박이 '몸통'일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침 사찰 보고서가 이명박 직보용으로 별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그래서 불법 사찰의 실무 총책임이던 “이영호가 입을 열면 정권이 흔들흔들

할 것”이란 걱정도 하고 있다. 사건을 무마하려 뿌린 수억 원의 출처도 의혹의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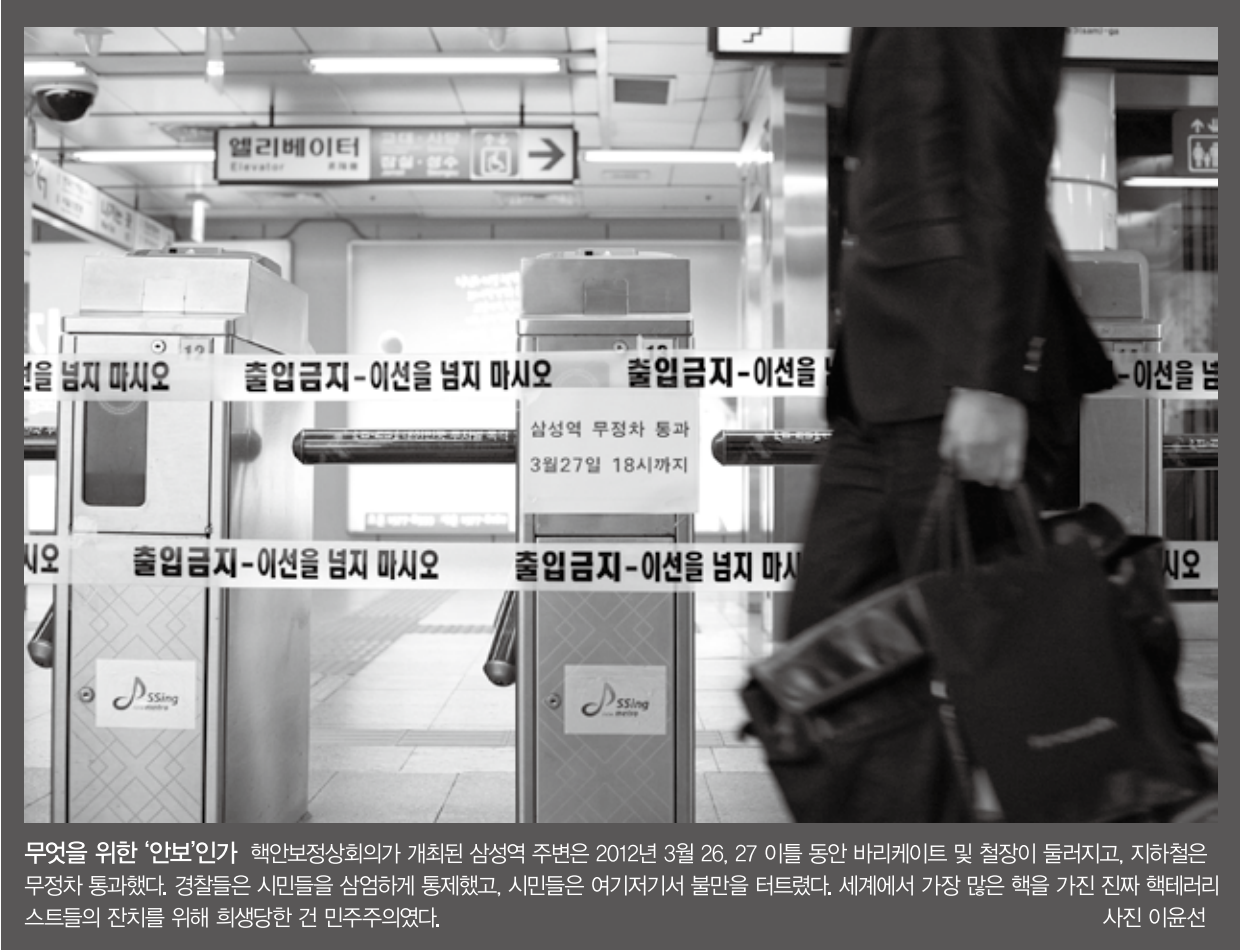
여기에 BBK 관련 의혹도 끊이지 않고 폭로되고 있다.

2007년 BBK 의혹이 근거없는 이명박 흡집내기라는 한나라당 주장의 근거가 된 신경화의 당시 편지가 그 동생 신명이 쓴 '가짜 편지'라는 게 들끓었다. 신명은 '가짜 편지' 작성을 요구한 배후에 이상득과 최시중이 있다고 지목했다.

게다가 BBK 재판을 하는 미국 법정에 이명박 스스로 BBK는 자기 회사의 계열사라고 증언한 진술서와 이명박의 BBK 명함이 증거로 제출돼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입만 열면 거짓말, 했다 하면 사기극인 이 정권을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김문성



무엇을 위한 '안보'인가 해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 삼성역 주변은 2012년 3월 26, 27 이틀 동안 바리케이트 및 철장이 둘러지고,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들은 시민들을 삼엄하게 통제했고, 시민들은 여기저기서 불만을 터뜨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가진 진짜 핵테러리스트들의 잔치를 위해 희생당한 건 민주주의였다. 사진 이윤선

해안보정상회의의 평가

위선만 넘쳤던 핵 독점 열강들의 잔치

3월 26~27일에 열린 해안보정상회의는 핵 보유 강대국들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메시지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북핵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발표와 달리 이명박은 미국을 포함해 무려 20여 개 나라 정상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다뤘다. 사실상 북한 압박을 위한 별도 회의가 열린 셈이다. 당연히 주요 언론들도 이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오바마는 비무장지대까지 찾아가 북한이 위성 발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식량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고, 미국과 정면 대립을 피하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했다. 유럽연합 상임의장도 위성 발사와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동시에 해안보정상회의의 직전에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전쟁 연습을 실시했다.

강패

해안보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에서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압박 조치가 강조됐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선언문에서는 글로벌 핵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첫 번째 조치로 유엔 안보리결의안 1540호와 1977호에



핵 강패들의 만찬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이들의 '평화적 핵 이용'이다. 사진 유정호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유엔 안보리결의안 1540호는 부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통과시킨 결의안인데 이는 미국 등이 공해상에서 북한이나 이란 등의 선박을 마음대로 검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전까지 이런 행동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다. 결의안 1977호는 1540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임무를 연장한 결의안이다.

2년 전에 열린 워싱턴 해안보정상회의에서는 '작업 문서'에만 포함된 이 내용이

이번에는 정상선언문에 직접 언급됐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반면 핵보유국들의 핵물질 감축 선언은 하나마나한 수준이었다. 그나마 '자발적 감축 약속을 하겠다는 약속' 같은 말장난에 불과했다. 초안에 있던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구조차 결국 삭제됐다. 또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국가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고 해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해 했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해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린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반면 일부 NGO들이 이 회의에 반대하는 행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되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만 주로 문제삼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사실 일부 NGO와 환경단체들은 핵안보정상회의의 '반대'를 분명히 하며 대중행동을 건설하는 것에 열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런 움직임을 발목잡고 김빠지게

학부모와 보육교사만 죽어나는

이명박의 무늬만 '무상 보육'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은 뜨거운 감자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은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요구를 외면한 기만책에 그쳤다.

정부의 대책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얼마 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완화해 어린이집들이 정부 지원료 외에 웃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폐업 협박까지 했지만, 정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쑥 뻗 채 규제 완화만 합의한 것이다.

결국 늘어난 특별활동 때문에 보육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공공노조 보육협의회가 우려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 줬다.

구체적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도 없다. 1만 명 넘는 국공립보육교사들이 처음으로 임금 동결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서명에 동참하며 항의한 결과, 내년부터 약간의 임금 인상과 임금 지급조건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조차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당장의 개선 요구는 무시한 것이다.

보육 노동자는 기본 임금이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 사정과 일시적인 정책에 따라 들쭉날쭉인 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이 높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는 아이들도 질 좋은 보육을 받기 어렵다.

또, 가장 중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빠진 채, 민간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불과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만 발표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이윤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시장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진정한 무상보육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투자하라.

정미순

새로 나왔습니다



KTX민영화: 재앙의 신호탄 -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강동훈 외 지음 / 다함께 / 3천 원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다름없는 4월 13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름책방(대희로), 숨어있는 책(신촌), 아산한 나라의 현재(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나지 않은 세계 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은 벗어난 것일까? 지난 몇 달간 상승세를 이어온 세계 증시는 그렇다는 신호를 보내 왔다. 반면 핫머니의 유입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금값은 급락했다.

물론 어느 단계에서는 이번 위기도 끝날 것이 확실하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마르크스가 ‘고장 난 순환’이라고 부른,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거듭해 왔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불황 그 자체가 실업을 통해 임금을 떨어뜨리고 수익성 없는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경기회복의 기초를 닦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현재 그런 시점에 도달했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의 증시 반등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지난 11월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한 마리오 드라기가 추진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의 영향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유럽 은행들이 도합 1조 유로의 자금을 3년간 저리로 대출 받게 되자 유로존 경제가 약간의 시간을 벌 것이다.

둘째,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오랜 침체 끝에 약간 더 높아졌다. 3월 중순에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대침체’ 초기인 2008년 2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승추세는 세계 다른 지역의 그림과는 상반된다. 예컨대 중국 경제는 계속 둔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구매관리자지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은 감소하고 있고, 기계류의 납품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 2월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14퍼센트 하락했다.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는 유럽 대륙의 제조업 생산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지난 가을 이래 줄곧 하락해 왔음을 말해 준다.

게다가 서방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유가도 오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틀은 유가 상승이 “세계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이번 위기는 값싼 대출의 범람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에 부풀어 오른 거대한 신용 거품이 터지면서 촉발됐다.

미션 임파서블

그 결과 가게, 기업, 정부 부문이 모두 빚더미에 앉게 됐다. 이제 이들은 ‘디레버리징’, 즉 부채 상환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증권 칼럼니스트인 존 오서즈는 어느 연구 논문을 인용하며 이렇게 썼다. “스웨덴 가게들이 1990년대의 신용 위기를 거치면서 7년 동안 털어낸 부채는 GDP의 44퍼센트에 맞먹었다. 미국은 여태껏 GDP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의 가게 부채를 털어냈다.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그 수치는 각각 10퍼센트와 6퍼센트다. 부채 해소 과정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미국의 경제 사정이 영국이나 스페인보다 나은 것은 어쩌면 미국의 디레버리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더 진척됐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디

레버리징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부채를 상환하려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위기는 국가 부채도 불어나게 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각국 정부가 민간부문 부채를 인수해 왔기 때문이다. 코스타스 라파비차스에서부터 누리엘 루비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논평가들이 지적하듯이, 최근에 단행된 그리스 “구제” 조치도 바로 유럽연합과 IMF가 민간 채권자들의 부실 채권을 대신 떠안은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그런 다음 각국 정부들이 자신의 부채를 줄이려고 공공지출을 삭감한다면 유효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그렇게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유로존 주변국들에게 강요된 국가 부채 한도를 지키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불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이 모든 일이 재앙적인 규모로 실현됐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보다 훨씬 큰 경제인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의 총 부채는 위기 발생 이후 실제로 증가했다. 스페인 경제학자 두 명은 스페인이 유럽연합의 요구대로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5.3퍼센트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경제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번역 천경록

세계적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3월 22일 캐나다 퀘벡 주의 대학생 22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2005년 봄 이래 최대 규모였다.

학생들은 주정부의 등록금 인상 계획에 반대해 시위에 나섰다. 주정부는 현재 1년에 2천 캐나다달러인 등록금을 향후 5년간 1천6백25캐나다달러(약 81퍼센트) 인상하려고 한다.

현재 학생 단체 1백45곳이 대표하는 2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무기한 동맹휴업에 나섰고, 이를 포함해 학생 단체 1백60곳이 대표하는 총 2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퀘벡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은 1월에 시작됐다. 등록금 인상 계획을 알게 된 학생 2백여 명이 긴급하게 교무부 건물을 봉쇄했고, 그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

학생들의 동맹휴업은 2월 14일 라발 대학교 퀘벡 캠퍼스에서 시작했다. 여기에는 1만 명이 참가했다.

시위와 동맹휴업 찬반 투표가 퀘벡 주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3월 7일 학생들은 주정부로 행진했고, 여기서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평화로운 행진을 하던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 일은 자유주의 정당인 퀘벡 자유당(PLQ)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PLQ 대표이자 퀘벡 주의 주지사인 장 사레는 그동안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사레는 2004~05년에도 장학금과 보조금을 대출로 전환시키려고 했다. 그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PLQ는 모든 대학교의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말이다. 당시 학생 23만 명이 동맹휴업에 나섰고 사레는 물러섰다.

1960년대에 일어난 “조용한 혁명”의 여파로 복지국가가 세워졌고 고등교육 진학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퀘벡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이 10곳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3백 곳이 넘고 고등교육 진학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퀘벡은 캐나다에서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곳이다. 1년 등록금이 2천 캐나다달러(약 2백70만 원)다. 이는 전혀 우연이 아니다. 이는 퀘벡 학생운동이 강력한 덕분이다. 1968년 이래로 다양한 요구를 둘러싸고 대규모 동맹휴업이 아홉 차례나 일어났고, 대부분 승리했다.

퀘벡의 대학생 수는 26만 8천 명 정도다. 따라서 최근의 무기한 동맹휴업에 참가한 20만 명 이상이라는 수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캐나다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3월 22일 포르투갈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벌여 포르투갈 운송 체계가 마비됐다. 노동자들은 노동법 개악과 긴축 조치에 맞서 행동에 나섰다.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는 지난해부터 포르투갈에 긴축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7백7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였다.

총파업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총리가 이끄는 포르투갈 우파 정부는 이 요구에 열렬히 호응했다. 1백40억 유로 규모의 감축을 시행하기 전인데도 이미 교사 수가 10퍼센트 줄었다.

공공 서비스 기업들이 매각되고 있고 도로 사용료가 운전자들이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인상되면서 거리가 텅 비게 됐다.

의료비가 인상되면서 지난 2월 사망률이 예년보다 20퍼센트 정도 상승했다. 트로이카의 정책이 시행된 뒤 응급실 이용료가 갑절이 됐다.

투쟁 수준이 훨씬 높았던 그리스와 달리 포르투갈은 트로이카의 모범생이었다.

그러나 포르투갈 경제의 침체는 더 심화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두 번째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그리스의 뒤를 따르리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

포르투갈의 주요 노조연맹 CGTP의 아르메노 카를로스 사무총장은 3월 22일 파업 전에 트로이카 관리들을 만났다. 카를로스는 그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로봇 같았다. 그들은 포르투갈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시장을 도우려고 이곳에 왔다.”

또 다른 주요 노조연맹인 UGT는 노동법 개악을 지지했지만, CGTP는 비조합원을 포괄하는 파업을 조직했다. 3월 22일 도시 36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구제금융을 받았던 또 다른 유럽 주변부 경제인 아일랜드도 이날 다시 불황으로 빠졌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토리노와 피사의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리구리아의 핀칸티에리 조선소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했다.

영국에서도 3월 28일 런던 일대의 교사·강사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에 맞서 파업에 나섰다. 이 파업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노동자들은 학교마다 피켓 라인을 형성할 정도로 투지가 높았다.

그리고 3월 29일 스페인에서는 18개월 만에 노동권 계약에 맞서 총파업이 일어날 예정이다.



사진 출처 Tina Mathot-Roberge

3월 22일 22만 명이 참가한 캐나다 퀘벡 대학생 시위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에 맞서는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폴라주 ⑦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색깔게임페인



illusion

북풍, 색깔론, 마녀사냥에 매달리는 ‘이명박근혜’

‘이명박근혜’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안보 위기론과 색깔론·마녀사냥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명박은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 한미FTA”라며 우파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매도했다. 또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시도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북풍’에 이용했다.

천안함 사건 2주기를 이용해 “응징”, “보복” 등의 연사를 써 가며 북풍 기원에 여념 없던 국방부는, 한미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 위성 추진체를 “요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위성 발사를 이용해 먹기에 바쁜 정부와 우파를 보면, 북한의 위성 발사 소식을 듣고 속으로 기뻐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조중동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여론조사 부정 사건을 이용해 색깔론 ‘소설’을 쓰며 ‘마녀사냥 파티’를 벌이고 있다.

이 황당한 소설을 읽어 보면, ‘이정희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판 마녀인데, 괴물들의 본거지인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을 꺾어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김정은에게 헌납하려 한다’는 것이다.

역겨운 반동

이 조중동식 소설을 그대로 베껴 쓴 새누리당의 요즘 논평은 1980년대 ‘반공 웅변 대회’를 보는 듯하다. 3월 25일에는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 놓고 묵념하는 세력[이] … 민주통합당을 이용해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선에서 소위 연합정권을 출범”시킬 것이라며 거품을 물었다.

특히 <조선일보>의 색깔론 보도들은 기사끼리도 사실관계가 안 맞을 정도라서, 소설가 공지영조차 “이런 소설가들을 제가 어찌 따라갈지, 갈 길이 멀니다”라고 비꼰 정도다.

이런 역겨운 반동은 사회 전반에서 사람들을 위축시키며 분위기를 우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가 총선을 앞두고 4월에 ‘일진회가 있는 학교 9천5백79곳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 의도다. 경찰청이 내려보낸 일진회 선정 기준을 보면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행위, 장기자랑 및 행사 시 앞에 나서는 행위, 학생들의 선망 대상 학생” 등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청소년 계엄령’이다.

이처럼 반동 공세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결과, ‘우파 결집’이라는 일차 목적은 부분적으로 달성한 듯하다.

공천에 불복해 분열할 듯하던 친이계들은 일단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 주자는 이명박의 설득으로 탈당을 멈추고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박근혜는 “이명박 탈당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했고 이상득을 경북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예위원장으로 앉혔다.

자유선진당과 국민생각 등이 바닥을 기는 반면 새누리당은 지지율을 회복했다. 박근혜는 “석달 전만 해도 선거도 치를 수 없을 것 같더니 이제 희망이 보인다”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패배를 모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새누리당의 패배 정도에 따라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 ‘지연된 분열’은 재개될 것이다.

다”고 안도했다.

주류 지배자들로서 총선 전에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도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원기 회복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심판을 말하면서도 심판의 구체적 내용은 빼놓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애초에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를 시작한 세력으로서 이 문제들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론 이명박 손에 피를 묻혀 선거에서 반사이익만 얻

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이런 어정쩡한 자세는 반MB 대중들에게 실망과 환멸을 불러 일으켰다.

어정쩡한

한미FTA 발효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새누리당에게 우파 결집이라는 호재로 작용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제 우파는 총선 구도를 최대한 더럽게 만들면서, 청년세대가 환멸과 냉소로 돌아서길 바랄 것이다. 또 민주통합당의 무능과 한계를 이용해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려 한다.

그러나 상황이 우파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있다. 민간인 사찰 파문과 ‘이명박근혜’ 공천을 보면서 정권 심판 정서는 커지고 있다.

북풍과 색깔론과 마녀사냥에나 매달리는 자들이 정권을 연장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청년세대 사이에서 “투표를 70퍼센트 운동”이 시작될 정도다.

따라서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패배를 모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새누리당의 패배 정도에 따라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 ‘지연된 분열’은 재개될 것이다.

친이계는 우파 분열의 책임만 뒤집어 쓰고 실패하기보다는 총선 이후를 도모하는 전술적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무난한 결과를 얻어도 살아남 구멍이 생기고, 패배하면 박근혜 책임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일단 이명박과 손을 잡은 박근혜로서도 정권 심판론 탓에 새누리당이 참패하면 ‘이명박 죽이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BBK는 여전히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에 놓인 지뢰밭이고 권력을 향한 탐욕스런 다름도 끝날 수가 없다.

김문성



박근혜가 쇠신의 상징으로 띄운 손수조의 ‘선거 비용 사기 사건’ 금세 타로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실체

‘1퍼센트’의 오른팔도, 왼팔도 대안이 아니다

무상급식 투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이명박 정부·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정권 심판 정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전국 16개 전체 시·도에서 2030세대 절반 이상이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국 투표층의 야권단일후보 지지는 새누리당 지지의 세 배가 넘는다(3월 23~24일 경향신문·KSOI의 휴대폰 여론조사).

이 때문에 박근혜는 이명박과 선을 긋는 척해 왔다. 장하준 교수가 “새누리당의 선거용 현수막을 보고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다”고 할 정도로 박근혜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의 ‘쇠신’이 사기극이었고 ‘이명박근혜가 한통속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게 ‘경제민주화’는커녕 ‘경제독점화’이고 ‘재벌 천국’이라는 것도 탄로났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주도해 온 인물들을 줄줄이 공천했다. MB경제정책 핵심인 이만우를 공천했고, KTX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 전 국토해양부 차관 김희국을 공천했다. 김희국은 4대강 사업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한미FTA 협상대표 김종

훈, 용산삼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무상급식 반대 운동을 주도한 하태경 열린 북한방송 대표 등이 ‘이명박근혜’표 공천 명단이다. 비례 1번에는 핵발전 찬양론자를 버젓이 공천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김종인조차 “공천된 사람들의 면모로 봤을 때 정권심판론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효익, 이봉화 등 여성차별적이고 부패한 인물들도 공천 대상에 포함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허태열 5억 수수설이 불거지는 등 “공천을 두고 …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다”(유정현 의원).

박근혜가 쇠신의 상징으로 띄운 손수조의 ‘선거 비용 사기 사건’은, 결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은 그대로인 새누리당의 실체를 잘 보여 줬다.

헛발질과 자살골

그러나 민주통합당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불과 3개월 만에 새누리당에게 다시 지지를 추격당한 것이 보여 주듯,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계속 ‘헛발질’하고, ‘자살골’이나 집어넣”(프레이먼)였다.

한미FTA 아합 주범인 김진표, 김성곤, 김동철을 결국 공천했고,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종북좌파” 운운하는 자를

먼저 사퇴시키지도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안을 만든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도 공천에서 결국 탈락했다. 유 교수는 당 지도부가 ‘재벌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원래의 재벌개혁안에서] 손톱, 발톱 많이 뺐다”며, 민주당 재벌개혁은 “조대형 사기극”이라고 폭로했다.

<한겨레>의 분석을 보면, 민주통합당이 총선 후보로 공천한 사람 중에 고위 관료, 자본가, 법조인 출신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재벌 개혁과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고 ‘재벌과 검찰이 좋아할 공천 결과’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실, 민주통합당의 ‘재벌 개혁’은 노동계급의 이익과는 무관한 더 경쟁력 있는 기업 모델의 추구일 뿐인데, 그마저 재벌들의 눈치와 압력에 따라 누더기가 된 것이다.

이런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새누리당과 재벌에 맞서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부패 추문도 빠지지 않는다. 당 내부 경선에서 대표 의혹을 받던 당직자가 투신하더니, 국민 경선 과정에서 버스까지 동원한 ‘차떼기’ 의혹이 등장했고, 비리 전력자들도 버젓이 공천됐다. 오죽하면 <한겨레> 조사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혁신 신뢰도가 민주통합당보다 높았다.

이런데도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자 노동운동 출신인 전순옥 씨 등 진보 출신 인사들 일부가 진보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 공천 대열에 합류한 것은 유감스럽다.

비록 공천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한미FTA 반대 운동가인 이해영 교수 등도 공천 신청을 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미FTA 추진정당이었고 지금도 분명히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또한, 이미 당 지도부로 입성한 진보적 NGO 활동가들이 민주통합당에 대한 공개적 비판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도 유감스럽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참패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 후보가 나오지 않은 곳에서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 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별 볼 일 없는 민주통합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런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편파방송, KTX민영화 등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리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최미진



진보 후보를 지지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전지윤·박성환

지금 이명박 정부와 우파가 펼치는 케케묵은 ‘종북좌파’ 색깔론의 핵심 표적은 통합진보당이다.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에 이어서 검찰은 FTA 날치기에 항거했던 김선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파는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통합진보당이 국회로 진출하면 한미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한미동맹 해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

다. <조선일보> 논설주간 송희영은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일삼던 1980년대 운동권 용사들이 30명 넘게 다음 국회에 진출[하면] ... 다음 국회에서 비정규직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대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고위 관료나 법조인, 자본가 출신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운동의 대표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운동의 대의와 목소리를 반영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맞서서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

당과 진보 후보들을 지지해야 한다. 김진표 같은 민주통합당 후보들 수십명보다도 날치기에 맞서 최루탄 의결을 할 용기가 있는 진보 후보 한 명의 당선이 더 가치있는 일이다.

자신감 고취

물론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과 이를 통한 자신감 고취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진보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이명박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다. 당선한 진보 후보들이 복지 확대, 부자 증세, 핵발전소 폐쇄, 비정규직 정·정규화 등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주장하는 것도 투쟁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번 4·11 총선에서 진보 후보가 출마한 곳은 전체 선거구의 30퍼센트 수준에 그친다.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전국적·포괄적 야권연대를 하면서 상당수 진보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보 후보가 없거나 사퇴한 지역에서 야권단일 후보로 출마한 민주통

합당의 후보가 대중에게 개혁적으로 여겨진다면 그 후보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을에서 개혁의원 대중은 민주통합당의 정동영에게 투표해서 새누리당의 ‘한미FTA 전도사’ 김중환을 패퇴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는 민주통합당의 배신적 전력과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비판적 투표 전술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을 통해서라도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2030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비판받아야 할 진짜 이유

문제는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문지마 야권연대’를 추구하면서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타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심판한다는 명분으로 새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은 김진표 등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경남 진주읍에서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 전직 도의원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우파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서울 중구와 서초 등지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자 후보 인준을 거부해서 주저앉히기까지 했다.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합의문에서도 한미FTA ‘폐기’는 ‘재협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는 ‘재검토’로, 핵발전소 ‘폐쇄’도 ‘재검토’로 후퇴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에 맞선 진보 진영의 단결과 투쟁 건설은 소홀해졌다. 되레 통합진보당과 다른 진보정당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의 골만 커졌다.

결국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우파의 비방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문지마 야권연대’를 추구하며 한미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한미동맹 해체를 이룰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진정한 문제다.

이 동지들은 민주통합당과 공동정부 구성까지 바라보는 전국적·포괄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진보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시켰다. 이 동지들은 그것이 ‘진보, 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정당화한다.

인민전선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비록 포퓰리즘적 기반이 있지만 주로 기업주들의 돈과 인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부르주아 정당이다. 그래서 대중의 필요와 이윤 논리가 충돌할 때는 언제나 후자에 타협해 왔다. 이것이 지난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도 거듭 드러난 진실이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과의 ‘문지마 야권연대’는 진보, 정의, 평화를 이루는 통

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성체제의 온갖 오물이 진보진영으로 스며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던 몇가지 사건들은 그것을 보여 준다.

관악을 여론조사 부정 사건, 성추행 전력 있는 사람이 검증 없이 공천됐던 일,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의 각종 잡음 등은 <한겨레>의 지적처럼 “진보정당이 기성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한 것이다.

이것은 경기동부연합 동지들이 패권적으로 추구해 온 인민전선 전략이 낳은 패해이기도 하다. 계급을 뛰어넘는 동맹을 통해 권력을 잡고 위로부터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민전선의 논리는 불의와 부패의 뿌리인 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기반해서 개혁을 추구하면서 모순을 겪게 된다. 즉, 기성 체제의 일부가 되면서 그 체제와 뗄 수 없는 관행들을 따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데서는 지도부 내에서 경기동부연합뿐 아니라 진보신당계와 참여당계도 다르지 않다.

진보정치의 대안과 과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번(4·11 총선에서 전국적·포괄적 야권연대) 경험을 쌓지 않으면 대선 때 야권연대나 이후 협력적 국정운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도 이미 ‘2012년 대선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집권 전망’을 거론한 바 있다.

이런 계급연합과 연립정부 노선은 선거에서 득표와 의석수 확대 등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고취와 단결 투쟁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좌파는 총선에서 진보 후보의 당선과 선전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진보진영의 개혁주의 지도부가 ‘문지마 야권연대’를 추진하고 향후 연립정부 참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고, 민주통합당의 불철저함에 실망한 진보·개혁 의원 대중에게 다가가며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럴 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커질 조짐까지 있는 ‘반새누리 비민주당’ 정서를 안철수 등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불가피한 특정 상황에서 민주통합당과 제휴할 수는 있지만, 민주통합당과의 불필요한 타협은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주요 사안에서 거듭 동요하고 이명박에 타협하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며,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중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KTX 민영화 철회, 언론 파업 연대 등을 위한 투쟁을 건설하고, 이것을 이명박 정부에 맞선 일반화된 정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월 11일 하루만 심판받아서 부족하다. 우리가 ‘쫓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투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투쟁 건설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비교

	한미FTA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
찬성	찬성	찬성	폐기가 아닌 재협상	폐기
제주해군기지	찬성	찬성	반대가 아닌 재검토	건설 반대와 백지화
복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비정규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핵발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종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한미FTA	FTA
새누리당 찬성	민주통합당 폐기가 아닌 재협상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 폐기	
제주해군기지 찬성	민주통합당 반대가 아닌 재검토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 건설 반대와 백지화	
복지	새누리당 전면 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반대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 반대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통합진보당 보편적 복지 말하지만 재원마련 대책 부족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	보편적 복지 지지
비정규직	새누리당 핵심적 개선책 반대
민주통합당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권 보호,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파견법 폐지 등 반대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파견법 폐지
핵발전	핵발전 찬성
종편	종편 특혜와 지원
민주통합당 종편 관련 공약 없음	종편사업권 전면 재검토

북한 위성 발사 논란

오바마·이명박이 쏘면 위성, 북이 쏘면 미사일?

김영익

북한 정부가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자 주변 열강들이 반발하면서 북한 때리기에 나섰다.

오바마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고립 및 제재 조치 강화” 가능성도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이 일본 근해를 향할 경우 요격도 불사하겠다’ 하고 으름장을 놔다. 이를 위해 이지스함,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대기시키려 한다.

이명박 정권도 북한 위성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했고, 국방부는 로켓이 “정상궤도를 벗어나면” 요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려 한다. 보수우익들은 현재 3백 킬로미터로 묶인 것을 최소 8백~1천 킬로미터까지 늘려야 한다고 성화다.

물론, 우리는 북한 위성 발사를 결코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주변 열강과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핵무기를 2천 기 이상 실전 배치한 국가다. 미국은 한반도 상공에 띄운 첩보 위성만 1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우주 기술을 군사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해 왔다.

한국도 그동안 위성과 로켓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나로호’의 2단 추진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경험’ 덕분에 ‘3천 킬로미터 급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력을 축적했다.’

일본은 자체 기술로 위성 개발과 로켓 발사를 모두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그리고 그 기술로 한반도와 중국 일대를 감시할 군사 위성들을 우주에 올려 왔다.

지난해만 미국은 18기, 중국은 19기의 로켓을 발사했다. 한국도 지금까지 총 13개 위성을 우주로 보냈다. 그럼에도 이들은 유독 북한의 위성 발사만을 문제 삼는다. 마치 자신들이 우주를 전세 냈다는 식이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허락을 받은 나라들만 우주에 위성을 쏠 수 있다는 제국주의적 행태인 것이다.

오바마는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그런 곳(로켓 발사)에 쓰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은 굉장히 어렵다” 하고 북한을 비난했지만, 오바마 자신도 2008년 경제 위기로 미국 민중의 고통이 커지는데도 아프가니스탄에 수만 명을 증파한 바 있다.

미국은 또 북한의 위성 발사가 2·29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지난해 미국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2·29 합의를 했던 것이다. 더구나 2·29 합의문에는 위성 발사 금지 문구도 없다.

게다가 그동안 북미 간 협상에서 술하게 ‘약속 위반’을 해 온 것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무자비하게 북한을 봉쇄·압박하면서, 가끔 쥐꼬리만 한 보상을 했다. 그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1994년 제네바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 내내 이행되지 않다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전면 부정됐다. 미국은 2000년 북미 미사일 합의도, 2005년 9·19 공동성명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받은 건 고작 중우 수백만 톤, 일부 경제 제재 완화일 뿐이다.

우주를 전세 냈나?

물론 위성 운반 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핵을 가진 북한의 위성 발사 능력 향상은 위협적인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애써 온 것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압박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해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 능력도, 중거리 미사일도 없는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그때보다 경제력이 후퇴했음에도, 핵무기 보유국이자 장거리 미사일을 가진 국가로 변모했다.

그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지렛대로 북한을 계속 악마화하고 압박한 결과였다. <AP통신>조차 “미국은 반복적으로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 왔고, 계획해 왔으며, 위협해 왔다” 하고 지적했다. 미국은 2001년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꼽은 이후 그것을 철회한 바가 없다.



서기관미국군기지

수원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한미일 정부는 북한 위성 발사를 핑계 삼아 위험천만한 군비 경쟁을 벌이려 한다.

이런 처지에서 북한 지배자들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다.

물론, 지금 미국과 북한이 “추가 제재”, “선전포고” 등 험악한 말들을 주고 받고 있지만, 이것이 당장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 문제 등 더 우선시할 현안들이 많고, 대선을 앞둔 오바마는 한반도 문제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압력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2·29 합의 직후에 바로 위성 발사 문제가 불거지듯이, 북미 간 합의는 근본에서 불안정하다. 북미 관계는 앞으로도 협상과 합의, 합의 파기와 강경 대응 등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갈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간에 지정학

적·경제적 긴장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위험론을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기존 동맹들을 강화해 왔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계획들도 하나같이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들이다. 당장 MD를 통해 북한 위성을 추적하고, 심지어 요격할 수도 있다는 미국과 일본의 대응은 중국을 자극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도 이번 기회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MD 체제에 참가하려 할 수 있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대신에 MD 참가 등을 미국과 주고 받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주변국의 강경 대응과 추가 제재가 북한 지배자들의 반발을 불러,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과 오바마의 북한 비난과 제재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겨레> 등이 제국주의 압박과 위선보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더 주되게 비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진보 진영은 혼들림 없는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인종차별 살인

지배자들의 인종차별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쿠리 피터센-스미스

미국의 10대 흑인 소년 트레이빈 마틴은 자율방범대원인 인종차별주의자 조지 지머만에게 살해됐다.

플로리다 샌포드 경찰은 마틴의 시신을 “존 도우(의명)”로 분류하고 약물검사를 실시했다. 마틴의 부모님이 사라진 아들을 애타게 찾는 동안 말이다.

샌포드 경찰은 지머만을 체포하지 않고 자율방범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놓아줬다.

트레이빈이 살해되기 몇 주 전인 3월 14일, 오클라호마 댈시터 경찰은 18세 흑인 데인 스캇 주니어를 살해했다.

경찰들은 스캇이 무장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등 뒤에서 스캇을 쏘았다.

데인 스캇 주니어가 죽은 지 일주일 뒤인 3월 21일, 사이마 알아와디가 살해됐다.

다섯 남매의 어머니인 사이마는 캘리

포니아 앨커후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타이어 지렛대로 무참히 폭행당한 뒤 의식 불명에 빠졌다.

사이마의 시신을 발견한 딸이 말하길, 범인은 히잡을 쓰고 있던 이라크 무슬림인 사이마 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고 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는 테러리스트다.”

트레이빈 마틴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버락 오바마는 우리 모두 어떻게 이런 살인이 일어났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레이빈과 사이마 등의 죽음은 미국 사회의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의 최근 추세가 낳은 비극적 결과다.

인종차별적 폭력은 미국이 건립될 때부터 미국 사회의 특징이었다.

1776년을 전후로 미국이 건립될 때 이미 미국 원주민들은 인종차별적 학살의 대상이 됐다. 노예가 된 흑인들은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럽 이주민이 몰밀듯

들어오며 인종차별적 잔혹함도 나타났다.

짧게 말하면 미국 내 인종차별주의 폭력은 미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최근에 벌어지는 인종차별의 한 가지 형태는 흑인과 무슬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흑인과 무슬림

지난 40년 동안 흑인들은 미국 역사나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규모 투옥됐다.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법학자이자 《새로운 짐 크로우: 색맹 시대의 대규모 투옥》의 저자인 미셸 알렉산더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트헤이트가 가장 기승을 부리던 시기보다, 최근 미국에서 더 많은 흑인들이 투옥된다고 말한다.

그토록 많은 흑인들을 가두는 이유의 핵심은 이데올로기적이었다. 정부 정책, 치안 활동, 언론을 통해 “흑인”은 “폭력배”와 결부됐다.

특히 9·11 테러가 일어나고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무슬림’은 ‘테러리스트’의 동의어가 됐다.

2001년 이래로 무수히 많은 무슬림과 아랍인들이 구금되고, 신문당하고, 추방당했다.

주류 언론과 정치 엘리트는 이른바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위협이라는 인종차별적 광란을 부추기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다.

자성해야 한다는 오바마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그리고 부시 등 모든 전임 행정부)의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매일 밤 흑인을 범죄자로 묘사하는 TV 뉴스를 내보내는 방송사들, 아랍인과 무슬림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며 아랍인과 무슬림의 모국을 침략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문사의 소유주들이 다.

오늘날 인종차별주의 분위기를 조성한 또 다른 요소는 2008년 대선을 전후해 벌인 우파들의 행동이다.

2008년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해

지면서 공화당 후보 존 매케인과 세라 페일린은 인종차별적 연사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해서 버락 오바마를 공격했고 공화당 내 강경 우익을 동원했다.

매케인의 선거운동은 나치를 환영하고 오바마 살해 선동이 용인됐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오바마가 당선한 날 밤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의 한 흑인 교회에 불을 질렀다. 이는 오바마 당선과 함께 일어난 여러 혐오 범죄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정치 무대에서 인종차별적 주장이 공공연하게 펼쳐지는 분위기에 침묵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최근의 인종차별적 살해를 낳은 것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다른 한편으로 아랍인과 무슬림들이 평화로운 미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협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들이 폭력을



비무장 지대에 간 오바마 미국의 대북 압박이아말로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위성 발사와 김정은 3대 세습

앞서 언급했듯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북한 압박과 악마화가 낳은 반응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는 주변 열강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다. 발사 계획을 미국에 사전에 알렸고, 국제 기구들에도 발사 계획을 통보했고 해외 참관단까지 허용할 듯하다. 결국 이번 위성 발사는 북한 대내적 필요가 더 크게 작용한 듯하다.

4월 15일은 김일성 1백 번째 생일이고, 이때 북한에서는 당 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 북한 관료들은 위성 발사를 계기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선포하고,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김정일의 업적으로 밝혀 온 위성 발사로 김정은의 '백두 혈통'을 강조하고, 김정은의 국방위원장 직 승계도 추진할 듯하다.

이는 북한이 반제국주의나 사회주의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보여 준다. 군비를 증강하면서, 제국주의 열강들과 협상·공존하려는 태도는 북한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임을 증명할 뿐이다.

동아시아 최빈국인 북한에게 위성 발사 비용은 엄청난 부담으로, 그만큼 인민에게 갈 식량과 생필품 지원이 희

생될 수밖에 없다.

북한 관료들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얻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어려운 인민들의 삶은 더 파폐해졌다.

이런 난관을 타개하고자, 북한 관료들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으나 지금껏 뚜렷한 진전이 없다.

인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북한 관료들은 '강성대국' 건설과 함께 '인민 생활 향상'도 약속해 왔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그나마도 최근 '강성국가'로 표현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해외 투자를 대거 유치할 수 없는 한, 북한 관료들은 북중 경협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데 그쳐, 최신 기술에의 접근, 투자 유치 등에 한계를 느낀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 중미 갈등의 불확실성 등이 북한 대외 정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와 3대 세습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북한 관료들은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봉착할 것이고,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틈을 뚫고 북한 민중의 아래로부터 저항이 발전하기를 바라야 한다.

당하는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사이마 살해 사건에서 비극적인 측면은 사이마와 그 가족이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다.

이라크는 두 가지 때문에 거의 살 수 없는 나라가 돼 버렸다. 하나는 지난 25년간 미국이 벌인 침략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에 반인도주의적 범죄로 남을 미국의 점령이다.

투쟁의 전통

최근의 살해 사건들은 인종차별적 폭력이 일상 생활의 특징이 돼 버린 미국 사회의 끔찍함을 드러낸다. 경찰의 비무장 흑인 살해나 흑인·아랍인·무슬림을 표적으로 한 혐오 범죄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놀라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이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 뉴스들은 혼란을 자아냈지만, 이 범죄들에 대응해서 인종

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연대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미국 전역에서 트레이빈 마틴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렸고,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인종차별주의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연대를 표현했다.

트레이빈과 사이마 사건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살인자들을 체포해서 기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인종차별적 제도에 맞서 싸우고 그것들을 파괴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죽음들을 계기로 행동을 호소하고 억압에 맞서 굳건히 싸웠던 전통을 복원해야 한다.

인종차별주의가 미국 역사의 핵심적 특징이지만, 인종차별주의에 맞선 투쟁도 미국 역사의 핵심적 특징이다. 우리는 그런 투쟁을 재구축하고, 심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출처 미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012년 3월 27일 / 번역 차승일

유럽의 내뽀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3월 18일 국제사회주의경향(IST)에 속한 사회주의자들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파노스 가르가나스(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최일봉(한국 다함께), 슈테판 보르노스트(독일 <마르크스 21>), 키어런 앨런(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이 몇 가지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눴다. 그 가운데 그리스의 내뽀 반대 투쟁에 대한 담화만 소개한다. 녹취와 번역을 위해 박준규·최일봉 동지가 수고를 해 줬다. [] 부분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레프트 21>이 덧붙인 것이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투쟁의 국면이 달라졌다. 다들 총선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총선일은 4월 29일이나 5월 6일이 될 것 같다.

그리스 정부는 자신이 선거를 치르기로 한 것은, 민간 은행가들과 협상이 잘 돼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 덕분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정부는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의 대중 투쟁으로 사회당(PASOK)이 분열해 정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그리스 총선을 반대한다. 하지만 선거를 하지 않으면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중투쟁보다는 선거주의가 대세다. 물론 파업 투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주에 전원 노조가 파업을 할 것이고, 언론 노조도 48시간 파업을 할 예정이다. 아직도 연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선원과 언론 노동자들도 연금을 공격받고 있어서 파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선거로 이동했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가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선거에서 좌파는 10~15퍼센트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좌파가 40퍼센트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예측했다.

그리 되면 좌파에게는 물론 내뽀 반대 투쟁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 벌써 좌파 내 우파들[공산당 같은 단체들을 가리킴]은 신속하게 좌파적 견해를 발표하며 생색을 내기 시작했다.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과 달리 지금은 아무도 긴축 재정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구제금융'도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부도와 정부 붕괴 사태가 닥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얼버무리고 있다. 이에 논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

모든 정당들이 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반자본주의 좌파 연합 안타르시아[Antarsya: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포함돼 있다]도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잘하면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3퍼센트 득표율인 20만 표를 얻으면 된다. 가능성이 꽤 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보다는 논쟁에 개입하고 우리

[혁명적 반자본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듯함]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 부채 탕감, 은행 국유화 등의 쟁점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개입했다. 계속해서 주장을 펴 나가야 한다.

한편 그리스 문제는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다. 투쟁이 금융가들에 대한 반대를 포함하고 있어 유럽연합 전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르코지가 질 수도 있다.[이 대답은 프랑스 유대인 학교 총기 난사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것이다.] 반(反)금융 정서는 유럽 전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슈테판 보르노스트 독일 내 논쟁도 양극화됐다. 한편에서는 지배계급 내 소수파가 그리스 '구제금융'을 반대한다. 이 입장은 노동계급 80퍼센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소수파 지배자들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그리스는 독일이 지원해도 파산할 것이므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메르켈이 주도하는 [지배계급 내의] 다수파가 '그리스와의 연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 민중과의 연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금융에 깊이 연관된 유럽 은행가들과의 연대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저항을 건설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독일 <마르크스 21>]는 '누구와 연대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논쟁에 개입하고 있다.

좌파당 디링케는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는 식으로 사실상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30만~40만 명 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다.

키어런 앨런 전에 아일랜드는 시장경제의 모범생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긴축 정책을 잘 이행하면 곧 경제가 다시 살아나 예전의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위기는 더 심화됐다.

이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노동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신페인당[북아일랜드 IRA(공화군)의 전통을 이어받은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 신페인당은 지지가 오르면서 종전의 정부 참여 불가 입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사회적 동반자 관계'라는 [계급 협력주의]사슬에 묶여 있던 아일랜드 노동계급이 바로 저항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 농촌 지역 중심으로 저항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주된 저항의 이슈는 재산세다. 조세 저항인 것이다. 1백 유로에서 6백 유로로 인상된 세금을 3월 21일까지 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납세 대상자의 14퍼센트만이 냈다.

또 다른 이슈는 5월에 있을 국민투표

와 관계 있다. 재정 적자의 구조와 관련된 논쟁이 양극화돼 전개되고 있다. 아일랜드 통합좌파연합 ULA[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이 포함되는 아직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택 문제 등 여러 쟁점들에 개입하고 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투쟁과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는 소극적으로 나오며 대부분 소비자 보이콧 등 소극적 운동을 건설하는 데 머물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안정화 방법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 이 이슈는 [신페인당처럼] 좌파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은행가들에 반대하는 광범한 투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의 내뽀 반대 투쟁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겠다. 지난해 6월 말과 11월 말 파업 이후 투쟁은 파편화됐다[단편적이 됐다].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대형 노조들이 급속도로 행동을 중단하고 심지어 타협을 하기도 했다.

유나이티(Unite the Union) 같은 노조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말만 좌파적으로 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3대 좌파 노조, 즉 PCS[공공부문]과 NUT[교사]와 UCU[대학 강사]도 비슷한 자세다. NUT 사무총장은 파업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도 낯가 말하며 후퇴하는 자세다.

이에 노조 내 우리 당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투쟁 수준을 유지하려고 개입하고 있다.

현재 3월 28일 파업이 예고돼 있지만 실제로 일어날지는 확실치 않다. 전국적 파업 계획은 부활절 휴가 직후에 열릴 NUT 대회에서나 알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좌파적인 노조는 우리와 친한 마크 서윙트카가 위원장인 PCS다. 그러나 서윙트카도 전국적인 파업에는 반대하고 있다.

파노스 지금 긴축 정책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문제다. 하나는 '그리스 구제금융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중앙은행의 개입,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 시장에 개입한 것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지배계급은 자화자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이다. 그리스의 위기는 끝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제금융이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알렉스 맞다. 위기에도 단계가 있듯이 투쟁에도 전진과 후퇴가 있다. 2008년 공황 직후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투쟁이 지난해 산업 투쟁으로 확대됐지만, 현재는 파편화됐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저항이 시작될 것이다. 아일랜드의 재산세 저항처럼 말이다.

그리스에 대한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런던에서는 그리스 대사관 앞에서 연대 시위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는 노조의 참가를 조직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이 확대돼야 한다.



3월 22일 아테네에서 열린 간호사들의 파업 시위

“아름다운 평화의 섬이 파괴되고 있어요”

경찰과 해군의 온갖 폭력·협박·벌금 등과 보수 진영의 색깔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을 인터뷰했다.

바위는 얼마나 폭파됐고 주민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질기게 끝까지 버려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중입니다. 지금 해군이 계획하는 대로 5월까지 1차 발파가 다 끝나더라도 바위 면적을 10퍼센트 정도 잃은 것에 불과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려고 해요. 구럼비 바위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한마디로 삶의 전부를 관장하던 곳이었죠. 구럼비 바위에서 낚시도 하고, 아영도 하고, 수영도 즐기고 했던 곳일 뿐 아니라 절도 하고 고사도 지내던 곳이었죠. 할망물이라 는 곳도 있었요. 강정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또 제사를 지낼 때도 그 물을 떠다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했기 때문에 탄생과 죽음의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그 바위가 파괴되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나이 든 어르신들이 생업 자체를 포기하고 공사장 정문에서 농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사람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도 파편이 튀든 말든 관계 없이 발파를 해 버린대라고요.

경찰과 해군의 폭력상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때습니까?

화약 운송을 막으려고 활동가와 주민들이 PVC파이프를 이용해 서로 팔을 연결했는데 경찰이 나타나자마자 ‘뚝 가저요’ 하더니 폭으로 PVC파이프를 썰러서 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사진 이종호

아 쪽에 집중 배치할 계획을 세우는 상황인데, 이 해군기지를 미국이 쓴다는 것은 상상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를 지구본을 놓고 선을 그어 보면요, 딱 요코스카라던가 하와이 쪽으로 날라가는 미사일 경로 상에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MD가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미국의 주요 전략 기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제주도가 희생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해군 내부 자료를 보면요, 아예 설계 배치도에 3백35미터 항공포함을 그려 놓고 설계를 했어요. 국방부가 처음에는 부인만 하다가 “미 항공모함이 한번 들어올 때마 다 미군이 내려서 한 60여 정도의 경계 수일이 생길 텐데 왜 반대하냐” 그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또 미 7함대 운영체제를 보면 3일만 기항을 해도 항모 전단이 구비한 모든 비행기를 다 육상 공항에 내려놓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항모 전단이 들어가는 근처에는 반드시 공군 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김지윤 기고

“굶핍 없이 싸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사진 이종호

제주에서도 살기 좋아 “일강정”으로 불리던 강정마을이 천연한 투쟁의 장이 된 지 오래다. 해군 당국은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뺨뺨하게도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토지 강제 수용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화유와 협박을 통해 주민들의 터전을 빼앗아 갔다. 이중계약서까지 만들어 주민들을 속이기도 했다. 정부는 국가 폭력을 동원해 반대세력을

났죠. 그러더니 바로 망치로 두들겨서 사람들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두들겨 부수면서 연행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크게 다치신 분이 많았어요. 한 분은 긴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지금까지 경찰과 해군은 이런 폭력을 수도 없이 벌여 왔어요. 게다가 지금 저 개인에게만도 벌금 5백만 원, 손해배상을 1억 원 가까이 청구했더라고요. 대충 이제까지 강정 주민들이 받은 벌금만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4억 원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적이 하는 짓이랑 뭐가 다르냐고 한 의 차원에서 한 해적 발언을 지금 집권세력은 정치적 선전으로 이용해 먹고요. 그동안 주민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로 푸는 방법을 취해도 지금 가슴속에 맺혀 있는 응어리가 풀어질까 말까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감정은을 추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해 버리나 “너희들은 국민이 아니다” 이런 선전을 받은 거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이용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둔기지 협정 등을 보면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쓰려고만 마음 먹으면 우리는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해상 진출을 원천 봉쇄하려고 세계 도처에 기지를 확장해 나가고 계속 해군력을 동아시아

단기는커녕 골짜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지적대로 제주 해군기지는 동아시아 긴장 강화를 부를 것이다 브루스 가능 글로벌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강정 해군기지는 분명 이들의 벌금 3억 원 을 넘었다. 세계적인 평화활동가 연지 켈터도 연행해 출국 명령을 내렸고 프랑스 인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는 기습적으로 강제추방 했다.

지난 19일 경찰은 파이프와 콘으로 몸과 자동차를 연결해 묶은 채로 폭파 저지 에 나선 시위대원 망치와 가위 등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고 연행해 갔다. 오죽하면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고, "해적기지"라며 울분을 토해냈는가.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민군복합 판 광 미항"으로 새로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과 자연 경관을 짓밟으며 짓는 기지가 과연 아름다울까? 무엇보다 기지 건설이 가지를 효과는 아릅



사진 이종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으려고 온 힘을 다해 투쟁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전국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공군이 들어오면 장거리 레이더, 통신 설비, 육상지원단 등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 제주도의 남쪽 부분은 전부 군사 기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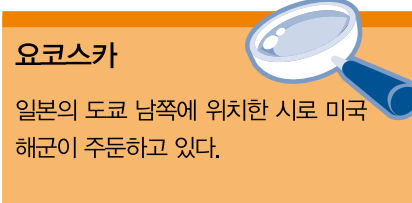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아권들이 보수 세력의 파상공세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있는 데 그럴 때일수록 원칙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몇 공사를 95퍼센트 나 해 놓고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해 철

회한 경험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사업비가 들었고 공사를 하고 있다 해도 잘못된 사업은 철회시켜야 합니다. 단지 제주도나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 그리고 자주와 민주를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정리 정성영



MD의 전초기지로서 제주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추진하는 MD(미사일발어체제)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정착한 한국형 이지스함은 요격 능력이 없어 MD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국정상황실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미군의 MD 또는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해 우리 측이 포괄적인 이해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2003년에 중

국과 인접한 한국 서남부에 PAC-3와 최첨단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했다. 미국의 MD 전략의 핵심 시스템들이 한국에 배치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와 미국 MD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2010년 7월에는 미국과 합동 미사일 요격 훈련까지 진행했다.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팔도로 나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최의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제주 해군기지에 파견하고 싶어 안달인 이유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지적처럼 "평택 미군기지가 미국 지상 MD의 거점이 되고 있다면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상 MD의 중간기지 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미국의 해상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북지 확대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 수십조 원을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식의 허황된 짓에 대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에 더 쉽게 휘말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강형구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전진을 위해

평화와 자연을 파괴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큰데도 어떻게 이명박 정부는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한미FTA 발효 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의 오락가락과 갈팡질팡이 한 구실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전 정권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한 '원죄'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3월 12일 관측 토론회에서 한명숙은 "안보적 측면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민 반대와 절차적 하자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김부겸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가 민주당 당론"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자꾸 이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 가능성 여부 등으로 쟁점을

호려 왔다. 21일 발표한 총선 공약 '7대 정책비전, 33대 정책약속, 2백50개 실천과제'에는 이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의 제주도지사 우근민도 마찬가지다. 우근민은 지난 8일 "15만 톤 크루즈 선 접안 시설 기능이 확화된 해군기지를 수용하고자" 한다며 "제주 해군기지는 안보 사업이자 국책사업이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우근민은 지난해 3월 제주도의회가 운동의 압력을 받아 강정마을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는 건을 의결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주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즉, 우근민은 제주도의회와 의결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에 맞서 공사 중단 명령을 이미 지난해 초에 할 수 있었다. 최근에도 우근민이 청문회, 시찰에 이선 등으로 뒷북을 치는 사이에 정

부는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안타깝게도 민주통합당의 관점이 야권연대를 매개로 진보정당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합의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합의했다. 지금, 민주통합당의 '재검토' 요구에 타협하는 것도 같은 위험을 날을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요구를 분별하 하며, 전국적인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하고 반제국주의 국제연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이현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제국주의는 지난 1백50여 년 동안 세계의 지형을 바꿔 왔고 지구를 황폐화시켰다. 제국주의는 석유 같은 자원을 수탈하는 것 이상을 뜻한다. 제국주의는 경제적·정치적·지역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나라들과 지역들을 재편하는 것도 뜻한다. 제국주의는 단순히 서방 열강이 군사력을 이용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주요 열강들 사이의 경쟁이다.

이런 경쟁은 자본주의가 탄생할 때부터 작동하던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국주의는 지금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왔다. 자본주의에 내재한 동학으로 말미암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가 되면 몇몇 기업들이 산업을 독점하게 됐다. 몇몇 기업들이 위기에 빠진 경쟁 기업들을 흡수하며 점점 더 적은 기업들로 자본이 집중됐다. 독점 기업들은 시장과 자원을 둘러싸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는 자국 국가와 융합하게 됐다.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독점 기업들을 희생시켜 자국 경제를 확장시키길 바란다. 러시아 혁명이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로 경쟁하는 열강들이 약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식민지로 삼으면서 세계의 대부분이 열강들 사이에서 분할됐다. 이런 경제적·전략적·정치적 경쟁은 불가피하게 1914년에 군사적 경쟁으로 이어졌다. 두 개의 자본주의 강대국 블록이 패권을 두고 싸운 제1차세계대전에서 노동자와 농민 수백만 명이 살육됐다. 제2차세계대전은 파시즘에 맞선 "선한 전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연합군은 시장 통제력과 자신들의 제국을 유지하려고 싸웠다.

힘 과시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으로 떠올랐다. 냉전이 발전하면서 세계는 두 개의 제국주의 블록으로 쪼개졌다. 소련의 새로운 지배계급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력을 안정화시키기를 원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동유럽을 지배했고 그곳에서 자원을 약탈했다. 소련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관료제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였다. 두 초강대국이 균형을 이루는 동안 전 세계에서는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각각의 블록이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벌인 잔혹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미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련은 헝가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서방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던 소련이 붕괴한 뒤 미국은 냉전의 승자가 됐다. 그 결과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다.

미국은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를 박살 내면서 자기 힘을 과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요 강대국 사이의 경쟁이 종식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록 미국이 분명한 군사적·정치적으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지만, 중국과 유럽 연합이 성장하며 경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게 됐다. 아돌프 히틀러는 "테러와의 전쟁"에 착수하며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을,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고 점령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일어난 거대한 규모의 살육과 저항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전략은 막대한 길로 접어들었고 네오콘의 희망은 좌절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제국주의적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고, 부상하는 중국을 겨냥해 군사적 대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도 군비증강을 하며 이에 대처하면서 불안정과 위험은 커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쇼셜리스트 워커> 2246호 번역 차승일

이집트 노동운동의 현 단계 — 분석과 전망

군부에 맞선 2월 11일 이집트 총파업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이집트 노동자들의 파업과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노동조건 개선과 재국유화를 요구한 대중교통 노동자 파업은 파장이 매우 컸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슬람주의자들이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고 독재 체제 인사들이 반격을 꾀하는 상황에서 이집트 노동자 운동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이집트의 새로운 노동운동이 가진 장점과 단점,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세력들을 **앤 알렉산더**가 살펴본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1, 2〉(책갈피)의 공저자인 앤 알렉산더는 영국의 대학강사로 중동 문제 전문가이고,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발행하는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바라크가 몰락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집트 노동운동의 풍경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파업 물결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재충전되고 있다.

파업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지만 다달이 새로운 행동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옛 어용 노총은 비록 무너지진 않았으나 크게 손상을 입고 약화했다.

새로운 민주노조들이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규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노조들 가운데 상당수는 노조 전통이 거의 없는 부문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민주노조의 성장은 고르지 못하고, 개별 작업장 수준을 뛰어넘는 단체를 만드는 일도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자 조직의 성장은 혁명 운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대한 거리 시위와 광장 농성이 계속된 덕분에 새로운 급진적인 활동가 세대가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분노는 주로 집권 세력인 이집트군 합동참모본부의 장군들[최고군사위원회]한테로 향했지만, 최근에는 새로 선출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개혁주의적인 이슬람주의 정당들한테로 향하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자유주의적 엘리트들이 반란에 참가하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대규모 거리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노동계급과 빈곤 계층의 젊은이들이다.

군부 통치를 끝장내자는 총파업 날인 2월 11일, 헬완과 만수라의 지방 대학들에서는 학생 수천 명이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바로 공장 노동자와 공무원의 아들딸이었다. 그러나 직장과 거리의 혁명적 분위기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 많은 학생이 시위에 나선 반면 파업 선언에 호응한 노동자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간극은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중요한 싸움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파업 요구 속에는 사회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기대가 담겨 있다.** 노동자들은 안정된 일자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부패한 관리자 제거를 바란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와 정의의 당’ 정치인들과 다양한 살라피주의* 정당의 정치인 들은 새로운 의회가 노동자들의 희망을 실현할 것이라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다.

모수가 거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같은 정치인들은 이집트의 경제 엘리트, 국제 금융기구, 워싱턴에 있는 무바라크 정권의 오랜 후원자들에게 자신들이 노동자 파업을 막을 것이라고도 약속한다.

이러한 자가당착뿐만 아니라 세계경



군부와 개혁주의 이슬람 정당들에 맞서 이집트 혁명이 전진하려면 노동자 운동의 혁명적 구실이 필수적이다.

제 위기라는 상황 탓에 새로운 정부에게는 사태를 해결할 모수가 거의 없다. 이집트는 아직 그리스 같은 형태의 금융 붕괴 상황에 이르지 않았으나, 이미 이집트 부채는 GDP의 70퍼센트에 이르고 신용평가 회사인 S&P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집트의 신용 등급을 세 번이나 강등했다.

노동자 운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해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봐야 한다. 첫째는 아래로부터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파업 활동이 직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몇몇 부문에서는 각 작업장 노동자들 사이의 협력이 강력한 조직으로 발전해서 전체 산업 부문들에 걸쳐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운동을 ‘위로부터’ 살펴 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와 정당의 활동이 노동자 조직의 발전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고려한다. 이러

한 두 가지 관점으로 신생 민주노조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조들 내부에, 특히 새로 생겨난 전국적 연맹 지도부와 현장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파업 동력은 아직 강력하다. 혁명 전보다 노동자들의 파업 참가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에만 50만~75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교사들의 전국적 파업과 같은 최초의 거대한 연대 파업들이 벌어졌다.

또, 버스 노동자들, 우편 노동자들, 설 탕공장 노동자들도 연대 파업을 벌였다. 공항 노동자들은 12월 말에 군인 관리자를 해임하고 민간인 관리자를 파견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올해 2월 말에는 대규모 버스 파업이 벌어져 나일강 삼각주 전체를 마비시켰고, 병원 노동자 수만 명도 전국적 파업을 벌였다.

이집트 노동조합총연맹(ETUF)은 수십 년 동안 무바라크 정권을 떠받치는 버팀목 구실을 했다. 이집트 노총은 한편으로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감시하고 억누르는 구실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혜택을 분배하는 구실을 했다.

이집트 노총은 거대한 선거 기구이기도 했다. 이집트 노총은 ‘노동자와 농민’에게 할당된 의회 의석 50퍼센트를 차지하려고 여당 편에서 활동했다. 오랫동안 이집트 노총은 선거나 특정 캠페인을 위한 집회·시위에 조합원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면서 독재 정권한테 ‘대중적 지지’라는 허울을 제공했다.

혁명 전에도 이집트 정부의 사유화 정책은 두 측면에서 이집트 노총을 약화시켰다. 이집트 노총은 사유화된 부문에서 수많은 조합원을 잃었고, 남은 조합원들

은 노총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거의 돌보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집트 노총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파업이 거대하게 벌어져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노총의 노동자 동원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무바라크에 맞선 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 노총 지도부는 독재 정권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집트 노총은 ‘낙타 전투’ 당시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대를 공격한 강패들을 모으는 일이나 무바라크를 지지하는 ‘대중 시위’를 소집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수많은 노동자는 파업에 돌입해 독재자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었다.

파업의 고삐를 죄다

그러나 이집트 노총이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다. 노총은 이제 파업 물결의 고삐를 죄려는 무슬림형제단의 시도를 돕고 있고 이 일에서 점점 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인사들은 진무바라크 관리들과 소수 좌파, 노동자 대표들과 함께 2011년 8월에 이집트 노총의 임시 집행부로 임명됐다. 2012년 2월 말 무렵 무슬림형제단과 관리 출신의 간부들은 노동조합의 자유에 대한 법안을 함께 작성했고, 기존 노총을 대신해서 경영주들과 협상할 특별 위원회를 창설해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이집트 노총 소속의 일부 노조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상운송 노조는 카이로 대중교통 기관에서 새로 생긴 민주노조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월 11일

총파업 선언에 호응해 버스 파업을 벌이는 요구를 좌절시키는 데 바로 이 육상운송 노조가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

‘위로부터’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국가가 민주노조들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집트 노총에 가맹한 노조만을 인정하는 현행법과 본질적으로 모순이지만, 정권은 새로운 민주노조들을 합법화했다.

무바라크가 몰락한 이래 민주적인 두 노총이 생겨났다. 이집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백40만 명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집트 민주노총의 위원장은 세무 공무원 노조의 지도자인 카말 아부 아이타다. 세무 공무원 노조는 혁명 이전에 생긴 최초의 민주노조였다.

그보다 작은 이집트 민주노동회의는 2백46개 노조를 가맹 단체로 두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동회의의 지도부는 전 금속노동자인 카말 압바스가 설립한 NGO 출신인데, 이 NGO는 이집트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하는 NGO 직원들의 구실을 둘러싸고 벌어진 심각한 논쟁 이후 지난 여름에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강력한 민주노조들은 대개 파업의 직접적 결과물로서 생겨났다. 예를 들어 카이로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만든 민주노조는 지난해 5월과 9월 사이에만 네 차례 파업을 벌였다. 민주적인 교원 노조들은 교사 파업의 전국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했고, 파업에 참가한 교사수는 새로운 노조들의 조합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민주노조 설립이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유령’ 노조나 한 줌의 노조원만으로 노조를 만드는 일도 가능해졌다. 또, 현장의 직접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노조 간부층이 출현할 여지도 생겼다.

현재 이집트 민주노조의 관리 기구는 매우 작고 재원과 상근 간부들도 매우 적지만, 이 노조들도 파업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중재자 구실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간부들이 파업을 배신하는 데 이용할 메커니즘이 아직은 매우 취약하지만, 거래 시도나 책략은 조합원들의 수동성과 좌절감을 키우고 자신감과 조직력을 약화할 것이다.

현장 기반을 건설하기

민주노조들을 군부 통치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한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민주노조의 지도부와 현장 사이의 단절은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민주노조의 지도적 활동가들은 군부에 맞서 파업을 벌이는 자는 혁명 활동가들의 호소를 강력히 지지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무바라크 몰락 후 1년이 되는 2월 11일을 기해 총파업을 선언했음에도 호응이 적었던 것은 앞서 말한 배경 때문이다. 이 총파업은 지난 1년 동안 거대한 시위와 가두 투쟁을 경험하며 급진화한 혁명적 활동가들이 호소했고, 이것은 혁명적 좌파 말고도 폭넓은 층의 사람들이 파업을 매우 강력한 무기로 본다는 점을 보여 줬다.

그러나 혁명 운동은 현장에서 정치적 파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만큼의 기반을 아직 닦지 못했고, 군부와 무슬림형제단이 합동으로 벌이는 파업 반대 캠페인에도 맞서야 한다.

정치적 파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전체 혁명 운동과 진행 중인 노동자 투쟁을 결합**시킬 수 있는 더 큰 혁명적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2월호 / 번역 정중수

무슬림형제단
이집트 최대 야당. 많은 무슬림형제단 활동가들이 이집트 혁명에 동참했지만, 그 지도부는 군부와 타협해 권력을 나눠 가지려 한다.

살라피주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원을 받는 극단적 금융주의자들의 이슬람주의 네트워크로서, 특히 이집트 남부인 상(上)이집트의 농촌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

낙타 전투
2011년 2월 2일 독재자 무바라크의 강패들이 낙타를 타고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공격했지만 시위대가 그들을 물리친 사건.

프랑스 툴루즈 살인 사건의 충격

이슬람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가 문제다

짐 울프리스가 프랑스 주류 정치인들이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짐 울프리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고,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프랑스 정치사를 가르치고 있다.

3월 19일 프랑스 툴루즈 유대인 학교에서 어린이 세 명과 교사 한 명이 살해된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 사건 일주일 전에 툴루즈 인근 몽토방에서도 군인 세 명이 살해됐는데 그중 두 명은 무슬림이었다. 첫 번째 살인은 미군 로버트 베일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린 여덟 명과 어린이 아홉 명을 살해한 3월 11일에 발생했다.

언론은 베일스가 입은 부상과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그의 만행을 이해해 주려고 했다. 그러나 툴루즈 살인자로 밝혀진 모하메드 메라의 사례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인종차별주의가 “마음 둘 곳 전혀 없는 사회”에 대한 그의 분노를 낳았다고 주장한 메라 변호사의 말을 보도한 곳도 없었다.

언론은 메라가 스스로 살인 이유로 설명한 것만을 보도했다. 메라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죽음을 이용해 유대인 어린이가 살해를 기괴하게 정당화했다. 그의 말은 이슬람주의 테러 위협이 있다는 경고로 활용됐다.

〈르 피가로〉는 메라의 죽음을 다룬 헤드라인 기사 제목으로 조지 부시가 이라크 침공 승리를 선포하며 사용한 “임무 완수”로 뽑았다. 주간지 〈르 포앵〉의 표지 제목은 “프랑스의 알라 미치광이”였다. 〈르 몽드〉는 메라를 “이슬람이라는 질병에서 자라난 괴물”이라고 쓴 기사를 게재했다.

언론의 이러한 대응은 이슬람을 프랑스 사회의 주요 문제로 보는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관점을 반영한다. 이슬람이 ‘프랑스 가치’를 쪼먹고 이주민 가정 출신 청년들이 더 넓은 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복수

이번 살인 사건에 뒤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적 단결을 주장했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우리 무슬림 동료”들에 대한 “차별과 복수”를 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말들 뒤에서 프랑스 사회의 인종차별주의 문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의 핵심에는 우파들이 촉진하고 있는 악랄한 이슬람혐오증이 있다.

지난해 가을, 프랑스 정부는 무슬림들이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파시스트 국민전선의 지도자 마린 르펜이 선동하고 다니던 쟁점이었다.

또한 르펜은 파리의 모든 육류가 할랄[이슬람 계율에 따라 도축된]이라고 주장해 무슬림 반대 정서를 부추기려 했다. 사르코지도 이 쟁점이 프랑스 유권자들의 주요 걱정거리라고 거들었다.

사르코지 정부의 내무부 장관 클라우드 게앙은 할랄 고기를 공공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메뉴에 포함하도록 한다면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들은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민자가 더 적어지면 상황이 더 좋아지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사르코지는 그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땅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통합 체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국민전선 지지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정치인들이 벌이는 노력의 일환



사진 출처: Stephen Sike (flickr.com)

2011년 니갑 착용 금지법 이후 니갑을 착용했다고 연행되는 무슬림 여성 프랑스 우익 정치인들은 인종차별주의를 강화하며 불평등을 정당화해 왔다.

이다. 개인의 책임과 문화적 실천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류 우파는 인종차별주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사르코지 자신이 인종차별주의를 불러일으켰다. 2005년 내무부 장관 시절,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도시 변두리 빈곤 지역에서 사는 청년들(그중 다수는 북아프리카계다)을 “쓰레기”라고 불렀다. 사르코지는 그 청년들을 물대포로 쏘아버리겠다고 떠벌었다.

사르코지는 프랑스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즉 세 명 중 한 명이 빈곤층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실업자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부른 것이다.

그런데 우익 정치인들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이 아니라 문화적·인종적 차이로 돌렸다. 한 장관은 소수인종 가정 출신 아이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쉬워서 고용주들이 매력을 덜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단지 그들의 처지에 대한 책임이 인종차별주의의 희생자들에게

있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런 주장은 ‘프랑스적 가치’가 위협당하고 있고 타락한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프랑스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으려는 더 광범한 계획의 일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확대가 아니라 법과 질서를 강제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주의와 이슬람혐오증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딱 들어맞는다. 주류 우파의 주장이 이제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지난 달 게앙은 ‘모든 문명들이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압제

게앙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평등·박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압제, 여성 차별, 사회적·인종적 혐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문명을 수호해야 한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사상은 프랑스의 식민 역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 “프랑스적 가치”가 이슬람보다 우월하다

는 관념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일부 프랑스 좌파들은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과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갑을 금지하는 법을 지지했다. 이것은 인종차별주의가 신뢰를 얻고, 인종차별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전반적으로 우경화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게앙 등이 극찬하는 그 ‘문명’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 프랑스에서 비유럽 출신자들은 교육·주택·고용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 부모가 북아프리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인 아이들은 부모가 프랑스 출신인 아이들보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비율이 두 배다. 학력이 같더라도 실업자가 되는 비율도 두 배다.

이슬람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와 불평등이 프랑스를 고장 난 사회로 만든다. 주류 정치인들은 이러한 실체를 가리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프랑스의 무슬림

인구 비중이 유럽에서 가장 크다.)

무슬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불의는 서방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제국주의적 만행, 그리고 인도주의 미사여구를 이용해 정당화하는 것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장됐다. 우리의 세계는 전쟁·불의·차별·불평등·빈곤으로 총체적으로 일그러진 세계다.

툴루즈에서 발생한 잔학한 사건들을 단지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이 아니라 이것들이 질병이다. 인종차별주의와 희생양 삼기는 오직 이런 끔찍한 질병을 확산시키기만 한다.

추천 소책자	
《람스주의와 테러》 개인적 테러가 왜 나타나며 왜 대안이 아닌지를 설명한다. 존 몰리뉴, 레온 트로츠키 다함께 / 1천 원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의 도전

툴루즈 사건이 프랑스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 사르코지는 이 살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불리한 대선 경쟁 상황을 만회하려고 한다. 사르코지는 테러리즘에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 대선은 결선투표제로 운영된다. 4월 22일 1차 선거에서 후보 열 명 중 1위와 2위 후보가 5월 6일에 결선을 치른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선거에서 사르코지와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가 막상막하로 지지를 받고 있고, 결선에서는 올랑드가 앞설 듯하다.

바스티유

선두권 아래에서 후보 세 명이 약 13퍼센트의 지지를 받는다. 마린 르펜, 프랑수아 바이루, 좌파전선 후보 장뤽 멜랑송이 그들이다. 좌파전선은 프랑스 사회당 출신과 프랑스 공산당의 연합체다. 사회당 장관 출신인 멜랑송은 선거운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진 출처: Rémi Noyon (flickr.com)

3월 18일 바스티유에서 열린 멜랑송 지지 유세에 10만 명이 참가했다.

3월 18일 지지자 10만 명이 바스티유에서 열린 유세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인터내셔널가와 프랑스 국가[라마르세예즈: 프랑스 혁명가를 불렀다. 멜랑송은 “시민 봉기”와 “대중 혁명”을 호소했다. 멜랑송의 성공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급진적 대안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최근까지는 반자본주의신당[NPA]이 이런 급진적 대안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처럼 보였다. 그러나 반자본주의신당은 기회를 놓쳤고 분열과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열과 내분의 가장 최근 사례는 반자본주의신당의 일부 주도적 회원들이 반자본주의신당 후보인 필립 푸투가 아니

라 멜랑송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푸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른 극좌파 후보인 노동자투쟁당 나탈리 아르토와 비슷한 수준인 1퍼센트 미만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극좌파 중 일부는 멜랑송 지지를 꺼린다. 왜냐하면 멜랑송이 이슬람혐오증에 부적절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멜랑송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의 “세속주의”를 지지했다. 극좌파들은 멜랑송이 사회당 정부에 가담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비록 멜랑송이 사회당과 거래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말이다.

이런 걱정과는 별개로, 멜랑송이 부상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사회당의 모호한 정책이 아니라 투쟁적 대안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멜랑송이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그의 역동적인 선거운동은 선거를 넘어서 급진 좌파가 발전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2296호 / 번역 최용찬



서평 |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박노자, 한겨레출판사, 3백10쪽, 1만 3천 원)



“자본주의의 진정한 얼굴, 도살기계”

이명박 정부를 생각하면, ‘국가가 폭력적이다’ 하는 말은 거의 동어반복처럼 들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나 그 무리들보다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정권과 국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길’ 바란다.

박노자의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는 국가의 폭력에 대해 근심하면서 국가를 고쳐 쓸 수 없는지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대중적 언어로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밝혀낸다는 것이다. 박노자는 책의 거의 절반을 할애해 “자본주의의 진정한 얼굴, 즉 도살기계로서의 [국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가 폭로하는 국가는 “부자의 재산과 소득원의 무조건적 보호[와] ... 특권과 권력의 보호[를 위해] ... 공권력에 의한 살인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조직이다. “한겨울에 쫓겨난 데 대해 ‘갑히 반발한’ 용산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명명”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만 그러한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일어난 참혹한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준비아말로 국가의 ‘기간산업’ 중 가장 핵심”이라는 박노자의 지적을 가슴에 와 닿게 한다.

국가의 파괴적 속성이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본성이라는 지적이야말로 다른 평화주의 서적과 구분되는 이 책의 강점이다.

“상시적 군사화 구조와 세계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결국,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하지 않고선 평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박노자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 때 미군의 “적군을 향한 자율적 사살 비율[병사 자신의 의지로 사거리 안의 적병을 사살한 비율]은 15~20퍼센트에 불과했다.” 전쟁터에서조차 살생을 망설이는 병사들 때문에 미군은 그 이후 반사적으로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훈련에 집중했고, 그 결과 참전 군인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평화주의의 한계

이어서 박노자는 국가가 어떻게 종교 등을 동원해 전쟁과 폭력을 미화해 왔는지를 지적한다. 로마제국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선언해서 박해받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전쟁 전도의 역사’를 가진 종교로 거듭나는지, ‘불살생의 종교’ 불교가 어떻게 전쟁을 찬양하고 전쟁 군주를 보필하는 도구로 기능했는지도 해박한 역사 지식으로 풍부하게 서술한다.

박노자는 소위 ‘동방예의지국’ 조선이 알려진 바와 달리 끔찍한 고문과 탄압으로 국가와 착취 체제를 유지했다고 폭로

한다. “몸을 찢어버리는 대포치에 대한 생물적 공포심, 이것이야말로 궁극에 가서 조선왕조의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 성리학적 지배자들에게 국경을 넘으려는 궁핍한 백성까지 잡아 죽이는 포괄적 사형제와 잔혹한 혹형, 선혈이 낭자한 소[가] 피착취자의 저항을 미리 방지하는 수단이었다.”

국제법과 조약으로 폭력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박노자는 회의적이다. “전쟁으로 득을 볼 지배계급이 계속 존재하는 한 ... 자본주의 가치관상 ‘국제법’과 ‘인도주의’보다 ‘효율’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본주의적 ‘효율’이 얼마든지 끔찍한 잔혹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다.

박노자는 “전쟁의 원인 제공자인 자본주의적 국가를 ... 극복하는 것” 만이 전쟁을 진정으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1차세계대전 때, 주류의 부르주아 ‘평화주의자’들이 별다른 반대 없이 전쟁에 협력하는 동안 독일의 칼 리프크네히트는 “당시에 그 어느 참전국에서 보지 못했던 대규모 반전평화 시위를 이끌었다. 그 후에 그가 국가 반역죄로 잡혀 재판을 받게 되자,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군수업체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 즉각적 평화와 제국주의·자본주의 타도를 외쳤다. ... 결국, 1918년 말에 혁명으로 독일제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에 이르렀다. ... 독일 노동자 혁명이 아니었다면 무의미한 전쟁은 훨씬 더 오랫동안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을 것이다.”

박노자는 종교적 평화주의 등 평화운동의 공과를 공정하게 서술하면서도, “계급적 좌파는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즉 대중운동과 연결돼 있었다”며, “특히 계급적인 좌파적 반전 평화운동이 ... 전쟁 발발의 사회정치적 원인이 무엇인지 유일하게 제대로 보여 줄 수 있었으며, 반전 평화운동의 더 넓은 맥락으로서 반자본주의 운동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 반전 평화운동의 진정한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대안에 관한 그의 서술은 대체로 훌륭하고, 급진화하고 있는 저자의 생각을 보여 준다. 다만 1차세계대전을 전후한 유럽의 혁명 물결에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밝히는 부분을 다소 소홀하게 다루고, 냉전기의 소련 스탈린주의 국가를 더 명료하게 비판하는 관점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그럼에도 이 책은 급진적 관점을 대중적 언어로 잘 풀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박노자 특유의 해박한 역사적 지식으로 매끈하게 마감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책이다. 더불어, 국가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낸 고전인 레닌의 소책자 《국가와 혁명》도 함께 읽기를 권한다.

김종효

“상시적 군사화 구조와 세계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결국,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하지 않고선 평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서평 | 《기후정의》이안 앵거스 역음, 이매진, 4백63쪽, 2만 원, 《의혹을 팝니다》나오미 오레스케스, 미지북스, 6백25쪽, 2만 5천 원)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반자본주의적 대안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선진국(미국 제외)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5퍼센트 줄이기로 한 교토협약이 올해 끝난다. 그러나 굳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교토협약이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교토협약 탈퇴를 선언했는데 1990년과 비교했을 때 배출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17퍼센트가량 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 러시아도 내년부터는 배출감축 의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유럽도 큰소리칠 형편은 못 된다.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이 확대됐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주로 경제 위기로 에너지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온다. 그러나 최근 출간된 《기후정의 —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은 이런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기후정의’라는 제목은, 각국 정부들의 기후협상이 책략과 기업 로비에 높아나는 것을 비판하며 등장한 기후정의 운동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주류 환경운동은 기후변화 문제를 사람들의 삶에서 떼어 낸 채 온실가스 감축만 강조하는 반면, 기후정의 운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경운동을 기존의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켰다.

이 책은 기아, 경제 양극화, 제3세계 부채, 기업 탐욕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등 자본주의 특징들과 기후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밝힌다.

예를 들어, 에탄올을 연료로 쓰는 계획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난을 악화시켰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했다.

이것은 단지 정책상의 실수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곡물을 얼마나 생산할지, 또 얼마나 식량으로 쓰고 나머지는 연료로 쓸지를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결정하고 각국 정부는 이를 후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다.

이 책의 저자들 중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글을 근거로 생태적 가치를 옹호하고, 자본주의를 개혁해서는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반갑다.

자본주의에 도전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모순적 위치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주장한다. 캐나다 녹색당이 자국 석유 회사들의 계약권을 지키는 데 몰두한 나머지, 일반 석유보다 온실가스가 세 배 많이 발생하는 ‘타르 샌드’ 채굴장을 폐쇄하라는 운동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것을 사례로 든다.

생태 사회주의

그동안 자본가들은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을 들먹이며 자연을 공공재로 두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왔는데, 이에 대한 통쾌한 반박을 이 책에서 읽을 수 있다. 또 자원을 비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이며, 전쟁, 광고, 일회용 포장지 민주적 사회주의 계획에서는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제시한다.

그러나 쿠바의 카스트로가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이룩했다고 치켜세우거나, 소련과 동유럽의 끔찍했던 환경파괴를 사회주의의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소련과 동유럽은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이었고, 쿠바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제 붕괴 때문에 자급자족을 강요당한 가난한 나라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노동조합이 기후정의 운동을 확대하는 데 왜 앞장서야 하는지 논쟁하는 글들도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석탄산업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장들과 함께 ‘청정 석탄’ 기술을 지지하는 것을 비판하며 사장들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노동자 재교육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만약 아직까지도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간 《의혹을 팝니다 — 담배 산업에서 지구 온난화까지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한 줌의 과학자들이, 인간이 산성비와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를 일으켰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30년 넘도록 부정해 왔는지 폭로한다.

이 책이 알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미국 정부가 이런 과학자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각종 정부기구와 자문단에 ‘낙하산’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주류 환경운동은 기후변화 문제를 사람들의 삶에서 떼어 낸 채 온실가스 감축만 강조하는 반면, 기후정의 운동은 환경운동을 기존의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켰다.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쟁점 오늘의 위기와 저항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의의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
계속되는 이집트 혁명
카다피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

특진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2)

금융화와 오늘의 세계경제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대담: 오늘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1. 마르크스의 경제위기론과 그에 대한 비판

서평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한국 노동계급은 쇠퇴했는가?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폰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리아 저항세력의 성격은 무엇인가

시리아 혁명을 둘러싸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에 있는 이라크 망명객인 **사미 라마다니**는 시리아 혁명 주도 세력이 서방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말한다. 반면 **사이먼 아사프**는 아래로부터의 민중 항쟁을 지지하며 서방 개입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이먼 아사프는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로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1, 2》(책갈피)의 공저자다.



친 나토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사미 라마다니

무자비하고 부패한 지배계급이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다. 하피즈 아사드의 1970년 쿠데타 이후 좌파 활동가들은 끔찍한 탄압에 고통 받고 있다. 이 쿠데타 이후 당시 미국무부 장관 헨리 키신저는 시리아를 ‘안정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묘사했다.

사우디의 봉건 독재자들에게서 자금 지원을 받은 하피즈 아사드 정권은 1970~90년대에 팔레스타인 저항을 약화시키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시리아 군대가 레바논의 친이스라엘 세력들과 연합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진보적 세력들을 패배시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이 정권은 또한 미국의 거래에 응답해 1991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했다.

그런데 몇 가지 요인들이 중동에서 시리아의 구실을 변화게 했다.

시리아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면서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저항 지원자로 변했다.

이란이 강력한 반미·반이스라엘 세력으로 부상한 것과 이라크에서 미군이 패배한 것도 변화를 부른 요인이다.

남부 레바논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사우디가 지원하는 세력을 몰리친 레바논 저항의 성장도 중요한 요인이다. 헤즈볼라가 이 저항을 지도하고 시리아

시리아의 대중 시위는 급진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세력들이 주도했지만 정권의 무자비한 살육에 이어, 분파주의자들과 알카에다식 저격수들의 테러가 더해져 상황이 변했다.

가 지원한다.

지금 시리아의 대중 시위는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됐고 급진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세력들이 주도했다.

하지만 정권의 무자비한 살육에 이어, 분파주의자들과 알카에다식 저격수들의 테러가 더해져 상황이 변했다.

설립

카타르 소유의 악독한 분파주의 언론인 〈알자지라〉와 서방 언론은 시리아에서의 사건들을 왜곡하고 있다.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시리아에서 친나토 세력들이 주도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력들이 시리아국가위원회와 자유시리아군대를 지배하고 있다.

자유시리아군대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서 설립됐고 터키의 군수 지원을 받

고 있다.

레바논의 미국·프랑스·이스라엘 연합군, 친미 이라크 군, 요르단, 리비아 테러리스트들과 나토 특수부대를 모두 시리아의 반혁명을 지원한다.

그런데 사이먼 아사프 등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놀랍게도 나토가 지원하는 자유시리아군대의 총잡이들을 혁명가들인 것처럼 말한다.

아랍의 봉기들에 겁이 난 카타르와 사우디의 족장들은 분파주의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과 살라피주의 성직자들에게 자금을 대고 있다. 그들은 시리아를 분열시켜 분파주의 내전으로 내몰려 한다.

하지만 만약 시리아가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제국주의·이스라엘 계획에 동참하고,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을 파괴하고, 이라크에서 미국을 돕는다면, 아사드 정권은 개혁을 실시하고 오는 5월에 있을 선거를 진행할 건강한 정권이라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라크를 파괴했다. 1백만 민중이 살해됐고 4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바로 이것이 만약 시리아에 대한 제국주의·사우디·카타르의 계획이 성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여 준다.

시리아 좌파와 반제국주의 세력 대부분은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평범한 민중에게 세계를 바꿀 힘이 있다

사이먼 아사프

시리아 혁명은 그 방향, 전략, 전술들에 대한 수많은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시리아 민중과 독재자에 맞선 그들의 투쟁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검은 세력들”의 작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아사드 정권의 지지자들은 시리아 민중을 걸프 왕자들의 지원을 받는 알카에다, 수니파 강패들, 살라피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기관들 또는 미국의 폭도각시로 여긴다.

이 각본에 따르면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쉽게 속고, 자기 스스로 이해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은 저항의 시작부터 “시리아 민중은 하나다”라는 구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시리아 항쟁은 알라위파나 기독교도들에 맞선 봉기가 아니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지지한다. 시리아 항쟁은 독재자에 맞선 반란이다.

시리아 정권의 지지자들은 탈영군인들을 서방의 대리인이라고 비난한다. 그들은 탈영병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학살 명령을 거부하고 탄압 대상이었던 이웃들 편으로 돌아선 군인들이라는 것을

진리는 단순하다. 아랍 정권들은 아랍 민중의 이해관계를 결코 대변하지 않는다. 이 정권들은 패배의 시기에 돌입한 실패한 정권들이다.

보지 않는다.

진리는 단순하다. 아랍 정권들은 아랍 민중의 이해관계를 결코 대변하지 않는다. 이 정권들은 패배의 시기에 돌입한 실패한 정권들이다.

이해관계들

시리아 민중은 아사드 정권이 개혁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아사드 정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왜냐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혁명은 개혁의 실패를 보여 주고 있다. 시리아 정권 지지자들은 서방이 지원하는 시리아국가위원회 사기꾼들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들은 혁명을 만들고 있는 지역위원회, 청년, 노동자, 농민, 좌파, 지역 활동가, 페이스북 활동가 들은 무시한다. 이들은 외부 개입을 반대한다. 시리아 정권 지지자들은 2006년 이스

라엘에 대한 레바논의 승리에서 바사르 아사드가 했던 구실을 칭찬한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피난민들에게 자신들의 집 문을 열어 줬고 이제 탄압에 의해 삶이 산산조각나고 있는 시리아 민중을 칭찬하지 않는다.

혁명을 통해 이집트, 예멘, 튀니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아랍 세계의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훨씬 더 강력한 잠재력이 분출됐다.

제국주의와 그 독재자들을 물리치고 또 물리친 것은 평범한 민중의 헌신이었다.

민중 운동은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이 대중 혁명들은 시리아 봉기를 무조건 지지한다. 이집트 봉기 기념일 타흐리르 광장에 나무꾼 시리아 혁명의 깃발이 이 점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혁명을 결코 지지하지 않았던 자들이 혁명을 포기하라고 한다. 왜? 이란에 대한 전쟁 위험 때문이다.

이 위협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 위협 때문에 아사드 정권의 탄압과 양심수·부패 문제들을 용감하게 제기한 사람들을 지탄해서도 안 된다.

다행히도 새로운 혁명 세대들은 오랜 전부터 이런 헛소리를 거부했다. 시리아 혁명은 그 자체의 역사와 도전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 시리아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서방 개입에도 반대해 투쟁할 것이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4월 9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비정규직 독자성이 아니라 정규직과의 통합이 대안”

양희삼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지회 수석 부지회장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 파견 최종 판결 이후 아산 공장에서도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민투위 소속의 ‘민주파’ 정규직 집행부가 당선하고 난 뒤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기대도 커졌다.

정규직 현장위원·대의원 등은 우리 비정규직과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고, 서로 격려하며 ‘올해는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 원년을 만들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물론 어려움도 있다. 주요하게는 2010년 25일간의 점거파업 실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최근 울산 공장의 정규직 활동가들이 ‘직가입 운동’을 주장하고, 연서명을 조직하고 있는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법원이 우리를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마당에, 정규직자부 조합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몽구가 두려워하는 원·하청 단결 투쟁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직가입 운동이 필요하다.

무기

물론, 일부 동지들은 우리 비정규직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정규직지부에 가입하면 정규직에 대한 의존을 부추기고 투쟁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투쟁을 돌아보면,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정서가 확대될 때 비정규직도 자신감을 찾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04년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 뒤에 그간 소극적이었던 정규직 노

조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대체인력(파트타임, 일용직) 투입 금지 긴급 지침’을 마련하며 움직일 체비에 나섰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기대와 사기도 같이 올라갔다. 지금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간부·대의원들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비정규직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전주 공장 정규직의 연대는 비정규직의 조직력 확대·유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직가입 운동은 이를 도모하기 위한 출발이다.

홀어지면 죽고 모치면 산다. 한국 최대의 민주노조인 현대차지부에 들어가 정규직과 하나될 기회, 더 많은 정규직을 연대 투쟁으로 조직할 기회를 놓쳐 버려선 안 된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싸울 것인지 냉철하게 반문해 봐야 한다.

전북 버스



노동자 내치고도 “노동 존중”? 3월 26일 정세균 선본 사무실 앞에서 항의하는 노동자들.

사진 박재환

“사측 편드는 민주통합당 정세균 지지 못한다”

파업 중인 전북지역의 버스 노동자들이 “호남의 여당 민주통합당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3월 16일부터 민주통합당 후보 정세균 선본 사무실 앞에 농성장을 차렸고, 3월 26일엔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 1백여 명이 상경해 집회를 열었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인정, 고소·고발 취하와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며 4백75일 동안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1백46일간의 파업 후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측이 단체협약 맺기를 거부하면서 재파업에 돌입했다. 최근엔 사측이 공격적인 직장폐쇄까지 단행해, 생계유지를 위해 잠시 다른 일을 하던 한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이런 버스 노동자들이 민주통합당 정세균을 향해 항의·촉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세균이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공천한 전북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버스 자본가들과 함께 버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며 경찰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전북 도민의 피같은

세금을 이런 버스 자본가들에게 퍼주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정세균을 지지하는 것은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노동 존중’, ‘복지’를 떠들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호남의 집권 여당인 민주통합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전북 도청과 시청, 정치인들이 시간 끌기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종인 부위원장도 “버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세균 후보가 결코 당선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3월 26일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 통합진보당 서울시장·종로구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다함께, 사노위 등이 함께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길거리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야권연대를 한다고 했다. 그런 만큼, 정세균을 정면 비판하고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이재환

성균관대

학교 측의 탄압에 맞서 단결해 싸우자

성균관대 당국이 시간 강사의 투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김상곤 유학대 학생회장에게 징계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3월 21일에 학교 당국의 부당한 강의 박탈에 맞서고 있는 류승완 박사에 연대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려대 김영곤 강사, 고려대 학생들, 인디 뮤지션들도 함께했다. 학교 당국은 엠프 사용을 막으려고 전기도 끊었지만, 행사는 계속됐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행사에 대한 사전승인이 없었고 외부 인사들이 참가한 것은 ‘학칙 위반’이라며 김상곤 학생회장에게 징계 위협을 가하고 있다. 김상곤 동지가 반성 대자보를 부착하고 총학생회에 제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학생중앙운영위원회가 그를 문책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캠퍼스에서 수시로 홍보 부스를 차리는 것은 아랑곳 않으면서, 토크콘서트만 문제 삼는 것은 완전한 이중잣대다.

학교 당국의 징계 협박은 학내 민주주의와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당국은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학생들을 위축·분열시키려 한다.

이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학교 당국은 이미 2월에 교직원을 동원해 1인 시위하던 류 박사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를 알리려는 〈성대신문〉의 발행을 막았다. 〈성대신문〉 기자들이 주간교수 사퇴 등을 요구하며 4주째 제작을 거부하고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3월 23일에는 ‘Occupy 대학생운동본부’ 소속 성균관대 학생들이 수원 캠퍼스에 친 텐트 농성장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의 탄압 공세에 단호히 맞서는 게 중요하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다 같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임준형 대학생다함께 활동가/성균관대

고려대 전학대회

압도적 지지로 ‘노동자 투쟁 연대 철회’ 결정을 뒤집다

3월 11일 고려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청소·강사노조 투쟁 지지 안건이 부결된 뒤,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안건이 부결되자마자, 여러 학생들이 전학대회 결정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3월 19일엔 사범대·문과대 등 학생회와 단체 23곳이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노동자 투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한겨레〉 등 여러 언론에도 보도됐다.

그리고 2주 뒤인 3월 25일, 임시 전학대회가 소집됐다. 이 자리는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으로 가득찼다.

지난 전학대회 때 노동자 투쟁 연대에 반대했던 생명대 학생회장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 하고 사과했다. 청소노조 투쟁 지지 안건은 ‘찬성 45, 반대 1, 기권 3’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어진 강사 투쟁 지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도 반대 발언은 없었다. 사범대, 정경대, 문과대,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등은 강사 투쟁을 적극 방어했다. 방청 온 학생들의 발언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대학 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장 김영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정당성을 호소한 것이 좋은 효과를 냈다. 결국 두 번째 안건도 ‘찬성 36 반대 0 기권 17’로 통과됐다.

정말 통쾌한 반전이었다. 이번 전학대회 결과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다수였음을 똑똑히 보여 줬다. 이것은 학생활동가들이 지난 전학대회 결정을 거슬러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나선 결과다.

소민호 대학생다함께 고려대도모

공무원노조

민주당 인천시장 송영길은 임금 삭감 철회하라

민주통합당 인천시장 송영길이 공무원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 확대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2년간 공무원 수당을 3백20억 원 줄이겠다고 했다가, 노조의 반발에 밀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삭감액을 줄여 2백4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시청에 우리 조합원이 없지만,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의 대응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런 압력 때문에 인천시가 일부 후퇴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앞으로 “시간의 근무에 대한 감도를 강화”해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파견 근무자들에게 제공되는 수당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재정위기 책임 전가 계획은 여전한 것이다.

송영길은 자신을 포함해 고위직 임

금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는 장차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술수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시간외수당을 30시간이나 줄여, 임금을 25만 원 가량 깎았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은 재정위기의 책임이 전혀 없다.

재정위기는 아시안게임 유치, 로트랜드 등 인천시가 추진한 무분별한 대형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됐기 때문에 발생했다. 인천시의 빚은 8조 8천억 원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긴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인천시의 이번 조처는 “재정이 어려운 타 지자체도 연쇄적으로 공무원 수당을 깎을 수 있는 선례”(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가 될 수 있다. 이미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일부 수당을 깎았고, 대전 동구는 올해도 예산에 두 달치 공무원 임금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송영길의 임금 삭감에 대한 대응을 지역본부에만 맡긴 것은 잘못이다.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과 하반기 임금 인상 조합원 총회 등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지금부터 당면 과제를 연결하며 함께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이 총선 야권연대에 기대느라 이런 중요한 문제에 침묵한 것도 유감이다. 이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민주통합당에 한 마디 공개 비판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활동가들이 움직여야 한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3퍼센트 퇴출제를 추진했을 때, 현장 활동가들이 노조 지도부보다 먼저 나서 ‘전국 모임’을 열어 대응했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언론 파업에 승리를!

파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언론 파업이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싸움에 나선 MBC는 역대 최장기 파업의 기록을 썼다. 최근엔 방송사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예능부장 4명이 보직을 내놨다. 이로써 예능 제작 차질은 확대될 듯하다.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2.1퍼센트까지 떨어져 “애국가 수준”이라는 조롱을 받았고, 외주 제작으로 만들어진 〈일밤〉은 1.7퍼센트 시청률로 밑바닥을 기었다.

파업 지지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신영복·조국·공지영·안철수 등이 노동자들을 응원한 데 이어, 방송 작가들과 영화인들도 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나이지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지지 서한도 도착했다.

그러나 사측의 대응도 강경하다. MBC 이용마 기자는 끝내 해고됐고, KBS에서도 ‘프로그램 복귀 불가’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간부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가해지고 있다.

조중동은 노동자들이 “민주통합당과 합작”해 정치적으로 파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지금 언론 노동자들이 지키려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대중의 개혁 염원이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다.

“지난해 한미FTA 정국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주 강정마을에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중동 찌라시’가 되길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은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일부 좌파들처럼 ‘민주당 돕는 투쟁’이란 식으로 이 투쟁을 방관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에 대한 태도 문제는 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논란 거리다. 손석춘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MBC 출신들이] 줄줄이 민주당에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정치인들과의 관계 설정에 엄청난 경계심이 없다면, 방송 파



낙하산 주범은 MB 3월 23일 언론 노동자 총결기대회. 투쟁의 판을 키워 '불공정 방송'의 원흉을 쓰러뜨려야 한다.

업은 한낱 정정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통합당의 파업 지지나 지원을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손 교수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는 옳게도 노무현 정부 아래서도 방송 통제가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조중동 종편과 미디어법 문제에서 계속 정부·여당에 타협하며 대중의

뒤통수를 쳐 왔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 출신 인사가 민주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언론노조 지도부가 그것을 지지할 게 아쉬운 이유다.

대정부 투쟁 전선

무엇보다 투쟁 지도부는 힘을 더 키우고 결집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지금 언론 파업의 주된 방향은 “대항 콘텐츠로 총선을 보도해 파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데 있다.

물론, 파업 노동자들이 제작·방송하고 있는 〈제대로 뉴스데스크〉, 〈리셋 KBS 뉴스9〉 등 팟캐스트들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전하는 이런 팟캐스트들은 정말 반갑다.

그러나 냉철히 말해, 이것이 투쟁의 힘을 대체할 수는 없다. **광범한 연대로 대정부 정치투쟁 전선을 치고,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결합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KBS 새노조 지도부가 〈1박2일〉PD의 현장 복귀를 허용한 것은

아쉽다. 오히려 오상진 아나운서가 전현무 씨의 파업 불참을 공개 비판한 것이 옳다.

YTN노조가 “방송 경쟁력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무기한 파업 돌입을 주저하는 것도 아쉽다. 정부와 사측은 걱정하고 몰아치는데, 우리 측이 신사답게 굴 이유가 없다.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방송사에선 외주화가 상당히 진척됐다. 이 때문에 파업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외주화는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도 동반해 왔으므로, 그동안 이를 막지 못한 것은 패착이다.

지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의 스태프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단결해야 한다.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이 필요도 있다.

KBS나 연합뉴스 노조도 더 많은 노동자들(수습기자를 포함해)을 파업에 동참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이 투쟁이 가진 정치적 성격을 부각시키며 더 광범한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하루 연대 파업’안에 60여 명(당일 참가 대원의 20퍼센트 이상)이 연서명한 것은 노동자들의 관심이 적잖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은 언론 투쟁을 지지하는 하루 파업 등에 나서며, 대규모 연대 집회를 조직해야 한다. 이 싸움에서 누가 기세를 잡느냐가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KTX 민영화 반대 등 여러 투쟁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언론사 노조들이 3월 25일 민중대회에 동원하지 않는 등 다른 투쟁과 힘을 합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투쟁의 약점이다. 각개약진해서는 승리를 거머쥐기 어렵다.

총선 전에도, 이후에도 우리는 힘을 집중해 함께 이명박에 맞서야 한다.

박설

1992년 MBC 파업의 교훈

3월 21일, MBC 노동자 파업이 51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MBC 역사상 최장기 파업인 1992년 9~10월의 50일간 파업을 갱신한 것이다.

지금의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당시 노태우도 언론 장악에 혈안이 돼 있었다. 1990년 1월 ‘3당 합당’ 후 언론의 여론 편향이 더 노골화됐다. 그해 7월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여당이 방송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9월 우루과이라운드에 반대하는 농민대회를 며칠 앞두고 〈PD수첩〉 방영이 갑자기 연기됐고, 이에 항의한 MBC 노조 간부들이 전격 해고됐다. 이듬해 초엔 빈부격차를 다룬 대하드라마 ‘땅’이 강제 종영됐다.

MBC 노동자들은 1988~89년 투쟁의 성과로 ‘공정방송 협의회’와 ‘보도·편성·TV기술국장 등의 노조 추천제’를 단

협에 명시해 뒀지만, 기고만장해진 사측은 1991년 6월부터 이를 공격하더니 급기야 조항 삭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의 친정권 편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정권의 무능·부패가 반복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불만을 쌓아 갔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상황을 이용해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노태우 정권이 하수인 사장 최창봉을 유임시키려고 했던 것이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1992년 말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당시, 노동자들은 MBC 로비를 점거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대열은 점차 늘어났고, 그 효과는 상당했다. 특히 당시엔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이 없었고, 방송사들도 적었던 터라 MBC 파업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은 훨씬 컸다.

최창봉이 대량 징계를 강행하고 노태

우가 파업 한 달 만에 MBC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약 2백 명을 연행했지만, 이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초기에 일손을 놓지 않았던 시설직과 송출직도 파업에 합류하면서 정상적인 방송은 불가능해졌다. 파업 효과는 극대화됐다.

연대로 강력했다. 59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시청 거부 운동과 광고주 상품 불매 운동 등을 벌였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했다. 방송사 쌍두마차의 한 축인 KBS에서 노동자 78퍼센트가 연대 파업 투표에 찬성했고, 언론노련이 대규모 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은 MBC 파업을 지지하는 전국 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소집했다.

이렇게 투쟁이 광범한 노동자 연대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노태우 정권은 실질적인 압력을 받았다. 정권 말기 반노태우 정서가 확산되는 속에서, 여기서 더 몰아붙였다가는 더 큰 투쟁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지배자들의 위기감도 커졌다.

마침내 MBC 노동자들은 파업 50일 만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국장추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장 해임 건의제를 도입하고, 해고자 문제는 복직을 적극 검토하며,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사규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연임을 노렸던 사장 최창봉은 이듬해 3월 사퇴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노동자들이 한 번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보여 줬다는 점이다.

오늘 또다시 ‘공정방송 쟁취’를 내건 MBC 파업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방송 통제에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야 한다. 20년 전에 그랬듯이 단호한 파업과 강력한 연대를 결합시켜서 승리로 나아가야 한다.

박종호



3당 합당

1990년 1월 노태우 정권은 1987년 항쟁의 성과를 도로 빼앗으려고, 김영삼(통일민주당)과 김종필(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었다. 이들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은 국회 의석 2/3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3당 합당은 이듬해 1991년 5월 투쟁 등 노동자·학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